

제391회 국회
(정기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국회 사무처

2021년9월13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

1. 국회의원(윤희숙) 사직의 건(의안번호 2112218)
2. 정치에 관한 질문

상정된 안건

1. 국회의원(윤희숙) 사직의 건(의안번호 2112218) 1
 - 신상발언 2
 - 비교섭단체(정의당) 대표발언 3
2. 정치에 관한 질문 7
 - 백혜련 의원 7
 - 권성동 의원 10
 - 민병덕 의원 14
 - 조해진 의원 19
 - 양기대 의원 23
 - 金熙國 의원 26
 - 박영순 의원 30
 - 전주혜 의원 36
 - 박성준 의원 40
 - 이용호 의원 44
 - 고민정 의원 49

(14시10분 개의)

○의장 박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회의원(윤희숙) 사직의 건(의안번호 2112218)

○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윤희숙)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주당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5조에 따라 회기 중 본회의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을 민주당 의원들이 좀 있을 때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자리에서…… 본인이 국회의원이라는 소중한 자리를 물러나면서 말씀드리고 가겠다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식 요청이 민주당 입장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민주당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하십시오, 5분 내에 들어오시라고.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개의 선언을 했습니다만 우리 여야 원내 지도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회의는 예정된 시각에 개의될 수 있도록 의원총회 시간을 맞춰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신상발언

(14시14분)

○의장 박병석 이 안전과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 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저의 의원직 사퇴를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이 지역구민에 대한 무책임이라는 지적은 백번 타당합니다.

가족의 일로 임기 중간에 사퇴를 청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책임에는 여러 측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공인으로서 세상에 내보낸 말에 대한 책임, 소위 언책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친정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그것이 최종적으로 법적 유죄인지와 상관없이 제 발언을 회화화할 여지가 큼니다. 이것은 제가 공인으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동시에 사인입니다. 사인으로서의 저는 저희 아버님의 행위가 겉으로 어떻게 비쳐지는지와 상관없이 위법의 의도가 없었다는 말씀을 믿어 드리고 수사 과정에서 그 옆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 역시 키우고 가르쳐 준 부모에 대해 제가 져야 할 책임입니다.

결국 제가 지금 직면한 문제는 부동산정책에 대해 공인으로서 쏘아 올린 화살이 제 가족에게 향할 때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입니다. 그 화살의 의미를 깎아내리거나 못 본 척하는 것은 제 자신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선택 앞에서 저는 의원직 사퇴라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도의적인 책임을 짐으로써, 가장 무거운 방식으로 책임을 짐으로써 그 화살의 의미를 살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의원들도 부모의 잘못으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6년 전에 호적을 분리한 부모님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습니다. 즉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의 행위는 정치인 본인의 수신제가 범위를 벗어나는 만큼 공식적인 책임을 지울 수

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인 책임과 의무의 문제일 뿐 도덕성에 관한 기준은 원래 일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대 이후로 공식적인 책임 범위와 개인의 내면적 도덕 기준은 분리됐고 그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 원리인 자유주의의 바탕입니다.

저는 제 나름의 방식으로 제가 보고 싶어 했던 정치인의 모습에 가까이 갈 뿐입니다. 정치인 개인이 도의적 책임을 지는 방식은 각자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그 각각의 방식은 인간 실존의 문제로서 모두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더구나 제가 사퇴 의사를 밝힌 후 20명에 이르는 여당 정치인들은 직업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라는 혐의를 씌워서 저를 파렴치범으로 몰았습니다. 근거 없는 음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담한 공작정치가 아니라면 이분들이야말로 앞장서서 제 사퇴를 가결시켜 주셔야 합니다.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을 때 가장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정치적 계산이나 음모의 일환으로 제 사퇴를 재단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결시키면 한 개인을 너무 띄워 주지 않을까, 정쟁의 유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계산에 매몰되는 한 자신의 언행을 무겁게 책임지려고 하는 정치는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부디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면서 가족의 곁을 지키겠다는 제 소망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석 윤희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을 국회법 제112조 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장철민 의원, 김선교 의원, 윤창현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박태형**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신 후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맞추어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21분 투표개시)

○**의장 박병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34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3표 중 가 188표, 부 23표, 기권 12표로서 국회의원(윤희숙)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비교섭단체(정의당) 대표발언

(14시35분)

○**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입니다.

150년 만의 고온이 시베리아를 덮쳤습니다. 100년 만의 기록적 폭우와 홍수가 서유럽을 강타했습니다. 캐나다, 미국, 그리스, 터키까지 대규모 산불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넘어서 기후위기, 기후재앙입니다.

햄버거에 토마토가 없어졌다는 뉴스는 섬뜩했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이상기후로 망친 농사가 쌀이나 밀이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시리아 내전은 러시아의 밀 농사 가뭄 때문이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요소로 간주했습니다. ‘기후변화와 맞서 싸운다’를 명시한 헌법 1조 개정안이 프랑스 하원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코앞으로 닥친 기후위기와 전쟁에 다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군사안보에는 그렇게 열심이면서 기후안보에는 최소한의 방어막 구축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 7개국과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은 P4G 서울선언문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외교적 참사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가 되겠다던 정부의 자화자찬에 대한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뒀이 되었습니다.

국회는 국제사회가 권고한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그린위싱, 녹색성장 개념도 빼놓지 않았습니까.

운송수단 중 비행기가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합니다.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은 항공노선 단축을 위해 힘쓰고 있는 동안 우리는 공항을 새로 짓겠다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국제적 민폐가 어디 있습니까.

삼척, 고성, 강릉 등에는 지금도 석탄화력발전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삶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고 밝혔던 국회, 이제는 제발 약속 좀 지킵시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멈춰야 합니다.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완전 폐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폐기하고 무분별한 공항 개발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9월 24일 기후위기 긴급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글로벌 기후 행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50여 국가에서 청소년들은 결석 시위를 하고 세계 시민들은 기후 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9월 6일부터 전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9월 24일 글로벌 기후 행동에 대한민국 국회의 앞장서야 합니다. 9월 24일 하루라도 300명 국회의원 모두 대중교통으로 출근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날 하루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도록 국회부터 실천합시다.

기후재앙의 마지노선 1.5℃까지 남은 시간은 제가 연설을 하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불과 7년 10개월 8일 22시간 40분입니다. 탄소중립은 현실과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 정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기후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후정의 국가로 나아가는 것은 대전환 시대의 시대정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 여당이 그토록 자화자찬하던 K-방역 이후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남은 것은 66조 원이 넘는 빚과 45만 개의 폐업 매장입니다. 끊길 듯 끊이지 않는 거리두기 조치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목숨이 끊길 판입니다.

지난 7일 23년간 맥줏집을 운영해 왔던 한 자영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장기간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입니다. 고인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원룸 월세방을 빼서 직원에게 월급을 주었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정부는 특별한 보상을 했습니까? 소급적용 주장을 끝내 외면하고 손실 보상 없는 가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들이 목숨 걸고 시간을 버는 동안 정부는 허술했던 공공의료 체계를 보완했습니까? 공공의료 현실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보건 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에만 매달려 그들을 코로나 블루, 악화된 노동 여건으로 내몰았습니다.

K-방역은 국민들의 혹독한 희생을 양분 삼았고 정부의 낮은 인권 감수성과 차별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불필요한 동선 공개로 성소수자들은 강제 아웃팅됐습니다. 더 깊어진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만 남았습니다.

백신 접종 후 여성들의 부정출혈 문제는 부작용을 인정받기는커녕 신고 대상에서조차 제외됐습니다.

이주민들 대다수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됐습니다.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내려졌습니다. 명백한 인종차별입니다.

백신 유급휴가 의무화는 끝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백신을 맞고도 쉬지도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처절한 희생을 대가로 한 방역, 차별

과 혐오, 인권침해를 낳는 방역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 전환을 말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평등하고 존엄한 방역대책으로의 전환입니다.

공공의료 강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전국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 의료기관을 마련하는 공공의료 확충 세부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고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명안전수당 제도화는 목숨 걸고 일하는 그들의 노고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재난 극복은 질병 퇴치를 넘어서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 우리 사회의 썩은 환부를 도려낼 때 가능합니다. 정부의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방역대책의 다음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두려운 것은 그 차별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는 평등하고 존엄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평등하고 존엄한 방역대책, 민생경제 회복 논의를 위한 국회 코로나 특위는 분명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초기부터 코로나 특위 구성을 수차례 제안했습니다. 골든타임 다 놓치고 이제 와서 위드 코로나 특위를 구성하자는 여당의 뒤늦은 민첩함이 놀랍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약자에게만 코로나 고통, 방역의 고통마저도 전가하는 이 현실을 하루빨리 끝내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 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십시오. 정의로운 고통분담, 차별받지 않는 방역대책 구축이야말로 진정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시대정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구제별을 넘어 신재별과의 싸움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그룹은 계열사 수만 118개입니다. 쿠팡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이어 국내 시총 5위권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출혈 경쟁으로 독점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독점으로 인한 가격상승의 피해는 결국 시민들의 몫입니다.

89.4%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카카오 택시는 탄력요금제로 요금을 야금야금 올리고 있습니다. 배달시장은 배민 등 배달 앱들로 독점됐

고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수수료, 광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가 하고 돈은 플랫폼이 번다고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갑질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불공정한 싸움이 모든 영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자본은 더 이상 스타트업이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가진 신재벌입니다.

대한민국헌법 119조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임 없이 권리만 누리는 플랫폼 공룡들에게 무슨 규제가 있으며 무슨 조정이 있습니까?

세계적인 흐름은 분명 바뀌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은 최근 10년간 구글에 약 11조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미 하원은 플랫폼 독점 종식 법안 등 5개 법안을 공동 발의해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규제에 나섰습니다.

과거 경제민주화를 넘어서 신경경제민주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 의회가 아마존 독점규제법을 발의했듯 우리 국회도 쿠팡 독점규제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 하원이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해 반독점 소위원회를 구성했듯이 우리 국회도 플랫폼 독점규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쿠팡,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시장 교란행위, 노동권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재벌, 신약탈, 신착취를 막읍시다. 플랫폼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의 제도화는 시대의 과제이자 시대적 요구입니다.

플랫폼 경제 확산은 출근과 퇴근의 일자리 개념을 지웠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배당되는 일거리를 수행하는 시대입니다.

2020년 비임금 노동자 수는 681만 명입니다. 분명 일하는 시민인데 임금의 최저선도, 노동시간의 규제도, 재해에 대한 보상도 없습니다. 일 자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노동관계법령은 일거리를 수행하는 이들에게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1953년생 낡은 근로기준법은 야만적인 자유계약 시장에서 일하는 시민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못합니다.

고용형태, 계약관계,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삶의 최저선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을 유지할 최저선의 소득을 넘어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과감히 구시대의 사회계약을 혁파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회계약의 시대를 여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권리 보장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 경제는 수십 년간 추격에 추격을 거듭해 이제 추월 경제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사회안전망은 아직도 한참 뒤에서 추격 중입니다.

550만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0.5%에 불과합니다. 프리랜서인 방송작가들은 코로나로 프로그램이 취소되거나 폐지되며 소득이 급감했습니다.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골프장 캐디 등 대면 업무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생계유지도 벅칩니다. 이들에게 고용보험은 그림의 떡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당장 전 국민 소득보험을 법제화해야만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 기반 보험체계를 소득 기반 보험체제로 당장 바뀌어야 합니다. 해고, 폐업에만 지급하던 실업급여를 소득의 손실까지 보전하는 소득보전급여로 당장 바뀌어야 합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대한민국입니다. 2018년 10인 미만 사업장 병가 제공 비율은 단 6.2%입니다. 이마저도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들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서야 내년 예산에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11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이 공적 재원, 기업 재원을 통해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금 당장 법제화해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는 저를 시작으로 상병수당을 당장 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감염병 위기가 닥쳐도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안정감, 아프면 쉴 수 있다는 안도감,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절박한 시대정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시절 박근혜정부의 재벌 총수 사면을 두고 재벌

특혜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정권 잡고 나니 이재용 씨 가석방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대선 출마 전 박근혜정부에게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을 두고 집회와 시위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불가피한 행동이라고 탄원서까지 보낸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정권 잡고 나니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했습니다.

노동 존중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의 실체는 재벌 존중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의 토건경제를 집요하게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는 도리어 사상 최대의 토건경제를 이룩했습니다.

SOC 예산은 27조 5000억 원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년간 예타 면제 사업은 무려 100조 원에 육박하며 이전 정부의 9년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반면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손실보상 요구에는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소급적용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서민들은 코로나 걸려 죽기 전에 가게 빛에 깔려 죽겠다는 판인데 민생 예산은 쪼그라들었습니다.

정부 수입은 늘고 지출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시국에 사실상 긴축재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빚 1000조 돌파는 무섭고 가게 빛 2000조 돌파는 무섭지 않다는 말입니까? 사람 중심 경제, 포용경제 다 어디로 갔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실체는 토건 포용경제였습니다. 재벌에게는 특혜를, 노동자에게는 쇠고랑을, 토건에는 확장재정을, 민생에는 긴축재정을.

그토록 공언하던 불평등과 격차 해소는 없었습니다. 포용적 회복과 도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회를 통해 반개혁 반민생 친기득권의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토 파괴 망령이 사라지지 않은 녹색성장법, 학급당 학생 수 제한이 빠진 교육기본법, 평시 군사법원 존치하는 군사법원법, 주권 국가의 자존심을 뭉개 버린 방위비분담금 협정비준동의까지, 다 나열하기도 벅칩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라고 다를 것도 없습니다. 서로 손가락질하지만 거울 보고 욕하는 꼴입니다. 위성정당 때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때도 중부세 개악안 때도 재벌 기득권, 부동산 기득권, 토건 기득권, 에너지 기득권, 정치 기득권 등 기

득권을 위해서는 서로 한 몸입니다.

그들이 개혁을 외면하고 양당정치의 정쟁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에도 재벌공화국, 토건경제, 성장제일주의는 더 공고해졌습니다. 그래 놓고 민생 앞에서는 대립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기득권 양당입니다.

힘없는 서민들이 해고, 폐업, 파산의 문턱을 오가며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순간에도, 청년들이 영끌 대출, 내구채 대출로 미래를 저당 잡히는 순간에도 재난지원금 20만 원씩 100%나 25만 원씩 88%나로 온종일 논쟁하던 양당입니다. 코로나 대책, 예산 등 민생 의제들은 추·윤 대리전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과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버린 더불어민주당, 174석의 더불어민주당도 그래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시민들은 적대적 공생관계에 빠진 기득권 양당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치의 등장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기존의 상식과 관례를 파괴하며 찾아옵니다. 시대정신은 기득권 교체가 아니라 기득권 파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류에게 처음으로 팬데믹이라는 재앙이 닥쳐왔을 때 정치인들은 너도나도 포스트 코로나, 대전환을 운운했습니다. 이제는 뭘가를 바꿀 것처럼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뭘가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더 극심해졌습니다. 생태 위기와 생계 위기, 증오와 차별의 위기, 플랫폼 신재벌의 신독점 위기,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노동의 위기 그리고 사회안전망의 위기, 이 모든 위기를 뭉개고 앉아 있는 정치의 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 정부는 이 위기들을 극복하는 정부이자 시대를 전환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득권 양당에는 이 위기를 극복할 의지도 없고 인물도 없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양당 중 어느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여당은 야당 탓, 야당은 여당 탓하며 정치보복과 내로남불이라는 한국 정치의 유구한 전통을 반복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자신의 생존과 반대세력 몰아내기가 집권의 목표가 되어 버린 기득권 양당은 결코 위기를 극복

하고 시대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다음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끄는 기후대통령의 시대, 고통분담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정부,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하고 존엄한 나라, 플랫폼 독점을 막는 신경제 민주화, 새로운 사회계약과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정부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 이상 강요된 차악의 선택으로는 이 거대한 전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양당만의 정권 재창출, 양당만의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대전환의 씨앗을 정의당이 뿌리겠습니다. 정의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박병석 배진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정치에 관한 질문

(14시57분)

○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2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이십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노출된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수원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을 국회의원 백혜련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전달한 고발장과 동일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국민의힘,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실제상황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총장의 측근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습니다. 사익을 보호했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국민의힘 내부고발로 시작된 국기문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수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몸통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후보는 제보자의 전력을 들먹이며 겁박하더니 이제는

허무맹랑한 국정원장 개입설을 퍼뜨리며 몰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삼삼오오 조를 이루어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온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의 잘못된 패밀리즘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응당한 처벌로 최순실 사태에 이은 검당유착 국기문란 사건을 막아야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라며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실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며 패스트트랙 당시가 떠올랐습니다. 장관님도 그때 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정당한 회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앞에서 몸으로 육탄방어를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이번에는 공수처의 정당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공수처는 적법한 영장의 집행이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건이 형사고발도 되어 있고 또 법원에 준항고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혜련 의원 공수처가 제시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영장의 집행절차에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보입니다. 김웅 의원의 자택 앞에서 압수수색의 범위와 의원회관 사무실이 포함된 영장을 제시했고 또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변호인 선임 여부까지 확인한 뒤에 보좌진으로부터 대리인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답을 듣고 의원실 컴퓨터에 접근했다고 합니다. 또 채증까지 했다고 하니까 준항고가 곧 기각될 것으로 보이지만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백혜련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컴퓨터 키워드 검색을 문제 삼았습니다. 문제 삼고 있는 키워드는 제가 살펴보니 모두 다 고발장에 있는 단어입니다. 특히 '오수'라는 단어들을 문제 삼았는데 오수라는 이름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밝혔듯이 도이치모터스의 대표이사입니다.

다. 그래서 고발장에 정확하게, 2020년 4월 3일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던 고발장이나와 있는 이름입니다. 당연히 공수처로서는 고발장을 찾는 것이 중요한 압수수색의 목적이고 저런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성함이 같아 가지고, ‘오수’라는 키워드는 공수처 설명에 의하면 합당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백혜련 의원** 그리고 당연히 보좌진의 컴퓨터를 검색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스스로 정점식 의원이 보좌진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의원들만이 아니라 향후에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공유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보좌진들의 컴퓨터도 검색하는 것이 압수수색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계속해서 말이 바뀌어 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수사를 둘러싼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9월 7일만 해도 현직 검사가 언급되어 있기에 공수처가 진행하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자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웅 의원이 적극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공수처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이라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사건 당사자인 김웅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체 규명을 요구하며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장 집행에 이르자 불법을 주장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의 민낯이라고 봅니다. 앞과 뒤가 전혀 다릅니다. 공당에서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말이 달라지고 있는데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백혜련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 가는 면이 있고요. 이 사건은 어찌됐든 검찰의 명예가 걸린 사건이고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혜련 의원** 이렇게 경악할 만한 일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제는 국정원장 개입설을 퍼뜨리

고 있습니다.

장관님, 공작은 비밀이 생명 아닙니까? SNS에 공범하고 만난 사실을 광고하는 그런 공작도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제가 뭐라고……

○**백혜련 의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이번 사건 관련 진상조사 중에 국정원장이 개입한 증거나 증언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현재까지는 제보자, 공익신고자라고 하는 분과 아마 최초 뉴스버스에 제보하고 보도가 나기 직전, 나기 전 중간 시점에 만남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백혜련 의원** 이번 고발 사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반해서 국정원장의 개입과 관련해서는 어떤 증거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국정원장 개입설을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좀 더 넓게 보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제가 뭐 백혜련 의원님 지적……

○**백혜련 의원** 오늘 장관님께서 말을 많이 아끼시네요.

그럼 이번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날짜별로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월 31일 MBC 뉴스에서 채널A 기자와 검찰간의 유착 의혹을 보도합니다.

4월 1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전화통화 12회, 한동훈 검사장-대검 대변인-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카톡방에서 45회나 대화를 나눕니다.

4월 2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은 전화통화 17회, 한동훈 검사장-대검 대변인-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은 카톡방에서 30회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4월 3일 첫 번째 고발장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김웅 의원에게 손준성 검사가 전달합니다. 이때 실명 판결문도 함께 전달됐습니다.

그다음에 4월 7일 대검 감찰본부장이 윤석열 총장에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착수하겠다고 알리고요, 그다음 날 4월 8일 손준성 검사 두 번째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합니다.

작년 4월에 이 사건이 있을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소속 청과 직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장관님?

○**법무부장관 박범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근무

했습니다.

○**백혜련 의원** 그렇지요? 부산고검 차장검사.

전혀 이 지휘라인과, 대검 지휘부와 통화하거나 이럴 위치에 있는 자리가 아니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적이……

○**백혜련 의원** 업무 관련으로 봤을 때 전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 자리 맞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백 의원님……

○**백혜련 의원** 지휘 라인에도 없는 사람이 총장과 수석 차례 통화하고 또 대검 수뇌부와 단톡방에서 이렇게 수많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고발장 접수 전에 이렇게 많은 대화가 오갔다는 것은 실제로 고발장 접수와 관련한, 고발장 전달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현재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 그런데 범조인으로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케이스는 개연성이 크다,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그래서 아무튼 요 며칠 모든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 지금 첫 번째 고발장과 관련해서 실명 판결문 유출 경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찰에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제가 지난주에 법사위와 예결위에 나와서 말씀드린 어떤 유의미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 뒤로 공수처에 의한 수사가 압수수색부터 해서 전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백 의원님께 소상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뒤합니다. 그렇지만 공수처에 의한 수사 그리고 검찰에 의한 진상조사가 저는 조속한 진상규명에 상당한 의미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의원** 처음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국민의힘의 입장은 당과 관련이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그러나 윤석열, 손준성…… 실제로 당에서 고발한 고발장의 내용이 김웅 의원에게 전달됐던 고발장과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세 개

의 이 고발장을 문서비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싱크로율을 살펴봤습니다.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받은 고발장과 미래통합당이 실제로 대검에 제출한 고발장은 96%가 일치합니다. 김웅 의원이 받은 고발장과 정점식 의원이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는 고발장은 98%가 일치합니다.

이 96%, 98% 일치도도 왜 이렇게 낮으면 큰따옴표를 작은따옴표로 바꾸고 서술어를 ‘있다’에서 ‘있습니다’ 이걸로 바꿔서 96%와 98% 일치지 실제로는 동일한 고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세쌍둥이입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김웅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이 정점식 의원을 거쳐 그것이 미래통합당이 실제 고발한 고발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법무부장관 박범계** 아무튼 판박이라는 언론의……

○**백혜련 의원** 이것은 법률적으로 봐도 분명히 인정될 거예요, 장관님. 법률적으로 봐도 인정되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발 사주의 문제는 내용이 더욱 심각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화면 띄워 주세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 회복을 도모하기로 했다, 여권의 실세들이 제보행위 조종하고 있다, 결국은 이 고발장의 핵심은 채널A 사건이 여권의 조직적 계획하에 이루어진 조작사건이다 이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고발장이라는 것은 고발 내용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지요. 결국 검사가 이 고발장을 작성했다면 수사의 의도가 명백히 이 고발장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그 추론은 맞습니다.

○**백혜련 의원** 당연히 고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검찰은 채널A 사건을 여권의 조직적 계획하에 이루어진 조작사건으로 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총장과 수사정보정책관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검 위임전결규정 띄워 주세요.

대검찰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수사정보정책관의 업무 대부분 중요사항과 관련해서 검찰총장

이 직접 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 직속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맞습니다.

○**백혜련 의원** 그러니까 수평적 구조가 아니라 검찰총장 밑에 있는 수직적 구조, 하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장관님께서 취임하시고 인사 단행할 때 윤석열 총장이 손준성 검사의 유임 요청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인사를 고려했었습니다. 그런데 총장의 뜻으로 유임의 뜻이,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전달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백혜련 의원** 그러니까 대검 쪽에서 장관님께서 인사를 하려고 할 때 손준성 검사를 수사정보 정책관으로 계속 유임해 달라는 대검의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백혜련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는 손준성 검사가 추미애 전 장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데 지금 법무부장관님의 말에 의하면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지요. 본인이 손준성 검사를 요청,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요청한 인사 아닙니까, 대검에서?

○**법무부장관 박범계** 전임 총장과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밝히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백혜련 의원** 그다음에 고발장 접수처를 꼭 대검으로 해 달라, 그것도 또 수신처가 공공수사부로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검을 고발장 접수처로 했을 때 생기는 효과가 뭐냐 하면 대검 접수사건의 경우에는 대검에서 관할청을 정하게 되어 있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그렇습니다.

○**백혜련 의원** 그러니까 관할청을 정하는 것으로부터 누가 수사할지를 대검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맞습니다.

○**백혜련 의원** 그리고 공공수사부라는 것은 예전에公安사건을 처리하던 부서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부터 처리 과정까지 수시로 대검과 협의하고 논의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公安사건은 대개 비중이 제 경험적으로도 그런데요 대검이, 공공수사부장

이 조금 더 비중이 높은 느낌이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 예, 제가 검사…… 이公安사건 만큼 철저하게 대검의 지시와 계통이 따르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검에 접수를 하고 공공수사부에서 수사하게 할 때는 대검이 이 사건 전체를 완전히 컨트롤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없는데 꼭 이것은 하나 물어봐야겠네요.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에도 관련 사건이 있고요 검찰에서도 지금 감찰이 진행되고 있고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수사할 합동수사본부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백혜련 의원님이 합동수사 본부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최대한 신속하게 엄정하게 사안의 실체가 규명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백혜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고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필요한 논란으로 더 큰 혼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은 신속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석** 백혜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강릉 출신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원도 강릉 출신의 권성동 의원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글쎄, 저도 보도된 내용 이

상은 알지 못합니다.

○권성동 의원 박지원 국정원장이 주도한 대선 개입, 불법 정치공작 사건입니다.

어제 SBS 8시 뉴스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보지 못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거나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 그냥 이진동 기자가 뭐 치자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던 날짜고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표현했다’ 이런 인터뷰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한 우리 원장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맥락으로 보면 국정원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의원 이 발언 보면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가 보도 날짜를 두고 상의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의원님, 그런 판단을 저보고 요구를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은 제가 당사자도 아니고……

○권성동 의원 아니,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다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아마 입장이 곤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아닙니다. 상식적인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또 제가 정부를 대표해서 와 있는데 의원님 그것을 또 함부로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권성동 의원 좋습니다.

한편 뉴스버스 이진동 발행인은 JTBC에서 ‘조 씨와 보도 시점에 의견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조성은 씨 발언과 앞뒤가 딱딱 들어맞아요. 소위 고발 사주 의혹을 일찍 보도하려고 했던 것은 뉴스버스 측이고 이것을 좀 늦춰서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보도하려고 했던 것은 박지원 원장 측입니다.

이 SBS 인터뷰에서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의 관계 그리고 뉴스버스의 보도에 박지원 원장이 개입했음을 은연중에 실토했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

장께서 그런 일에 관여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성동 의원 제가 또 하나 제보받았거든요.

박지원 원장과 아주 가까웠던 측근, 전직 의원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성은 씨가 이 사건 관련 자료를 보도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사전에 보내 줬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런 얘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저는 전혀 금시초문입니다마는.

○권성동 의원 이 조성은 씨 발언을 보면 이 사건은 명백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자 국정원의 공작 게이트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에 의한 고발 사주가 아니라 박지원에 의한 정치공작 사주다 이렇게 규정지어도 무리가 없겠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의원님?

○권성동 의원 그러면 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이 뭐니까?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사이에 이 고발장 관련 자료를 전달했는지 여부인가요, 아니면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지시 개입 또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입니까? 어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전체 지금 현재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아무래도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의 일부를 이용을 해서 정치개입을 시도했다라는 게 그게 핵심처럼 보이는데……

○권성동 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주가 되려면 윤 총장이 지시했느냐 관여했느냐가 핵심이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그런 부분들은 아마……

○권성동 의원 그것을 사주를 주장하려면 그가 관여하였다는 조그마한 아주 작은 정황증거라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뉴스버스 보도도 그렇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또 민주당의 인사 어느 누구도 윤석열이 관여하거나 지시했다는 조그마한 증거, 정황증거도 지금 제시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지금까지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런 게 없다고 아직까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수처가 이번에 무슨 영장을 발부하고 하는 과정에 어떤 판단 근거가 있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권성동 의원 그런데 여권이 공격하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다, 그래서 손 검사가 한 일을 검찰총장이 모를 리 없겠다라는 추정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준성 검사가 최측근이라는 주장은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만들어진 정치 프레임입니다.

작년 1월 달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검 간부진들 다 교체를 했어요. 그 손준성 검사 전임자인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이 6개월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때 윤 총장이 유임시켜 달라고 그랬어요, 김유철 검사를.

그런데 작년 2월 달에 발령받아서 4월 3일 날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2월 8일 날 손준성 검사가 발령받았는데 두 달도 채 안 되는 시기에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 됐다, 추미애가 인사한 사람이? 이것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한번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작 사건으로 누가 재미를 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김경수 지사입니까, 문제인 후보입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의원님, 아직까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기는 그런데요.

○권성동 의원 아니, 김경수 지사가 문제인 후보 수행팀장인데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수혜자가, 최대 이익을 본 사람이 문제인 후보지요. 이 사건을 갖고 문제인 후보 여론 조작 사주 의혹이라고 부른다면 총리께서 동의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반증이 또 워낙 많지 않습니까?

○권성동 의원 그러니까 동의 못 하시잖아요.

○국무총리 김부겸 예.

○권성동 의원 그다음에 청와대 울산시장 부정선거 공작 사건으로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 박형철 등 청와대 비서관 6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병도입니까, 문제인 대통령입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의원님, 아직까지 지금 재판 서류 중인 것으로 알고……

○권성동 의원 울산시장 당선으로 영남의 정책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최대 수혜자는 문제인 대통령이에요. 이 사건 갖고 문제인 대통령이 사주했다 이렇게 비판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다음 PPT,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공작 사건으로 문제인 정부의 초대 산업부장관과 또 산업정책비서관이 기소가 되었어요. 이 사건 문제인 대통령이 사주했다 이렇게 야당이 주장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이 문제는 아직까지, 이제 아직……

○권성동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주했다라고 여권에서 주장을 하니까 제가 이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그런데 이 앞에서 제가 열거한 사건들은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기소됐거나 한 사건들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다 부인하는 게 여권 아닙니까?

그런데 사주했다는 아무런 정황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의원님, 조금 이것은…… 사건이라는 것도 다 흐름이 있을 테니까 또 진행이 되다 보면 의원님 주장하시는 게 맞는지 혹은 지금 공수처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하는 게 또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권성동 의원 그다음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려면요 윤 총장 입장에서 이런 일을 벌일 만한 이익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고발장 내용을 보면 윤 총장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 사건이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건 다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했고 지금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친문 검사인 이성윤 검사장이에요. 자기와 반대편에 서 있는 이성윤 검사장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측근을 보내서 수사받게 하고 싶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또 모 언론사의 정보보고에 의하면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이 사건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터뜨리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나간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공식 후보로 확정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일찍 나와서 당황했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저도 기자한테 들었어요.

이것 들은 바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전연 들은 바 없습니다.

○권성동 의원 김대업 사건은 정치공작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결국 나중에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그런데 이 제보자 조성은 씨의 실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작년 총선을 앞두고 브랜드뉴파티라는 정당 창당 과정에서 허위 당원 명부를 만든 전력이 있고요, 회사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000만원 대출받아 가지고 이것 다 연체하고 있습니다. 미납된 국세가 500만 원 있고요. 또 금년에 외제 고급 차를 구입했고 용산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겸 오피스텔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이 돈 1000만원, 500만 원이 없어서 신용불량 상태에 빠졌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자금 출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의원님, 제가 이 내용이나 이 개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권성동 의원**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가 정치적 수양딸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그 이상의 관계라는 얘기도 있는데 들어 봤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저도 그냥 언론보도를 보았을 뿐입니다.

○**권성동 의원** 총리님, 의원 시절에 TV 토론 나가신 적 있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예, 몇 번 나갔었습니다.

○**권성동 의원** 그때 누가 수행하나요?

○**국무총리 김부겸** 보통 보좌관이든……

○**권성동 의원** 보좌진이 하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비서 누구 한 사람이 따라가지요.

○**권성동 의원** 그런데 박지원 원장이 TV 토론 나가거나 또 국정원장 가기 전에 TV 토론 나갈 때 누가 수행했는지 압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조성은 씨가 수행했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이게?

그리고 두 사람 간의 관계가 SNS에도 나왔는데 이것도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뉴스버스에 최초 제보한 시점 7월 21일과 첫 보도 9월 2일 사이인 8월 11일, 롯데호텔의 38층 고급 일식당 모모야마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 알고 있지요, 박 원장과 조성은 씨가?

○**국무총리 김부겸** 예,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는 봤습니다마는.

○**권성동 의원** 또 윤석열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했던 지난 9월 8일 저녁에도 둘이 또 만났다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롯데호텔 32층 소공동, 국정원장 안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권성동 의원** 조성은 씨가 국정원장 공판에도 드나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국정원장이 작년 총선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조성은 씨와 이런 잦은 만남을 했다는 자체가 과연 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아마 뭐 국정원장님께서 판단이 있으셨겠지만 제가 뭐라고, 그런 사적인 만남에까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권성동 의원** 국정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PPT 한번 봐 주시면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 씨가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한 시점이 7월 21일인데 그때는 ‘손준성 보냄’만 보이고 고발장 전문 내용은 다 끊겨서 보이지 않고요. 하여튼 8월 11일을 전후해서, 8월 11일 날 박지원 원장을 만났는데 그 전후해서 계속해서 캡처를 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 박지원 원장 만남 전후해서 중요한 자료들이 집중적으로 오고 갔고, 박지원 원장의 그런 코치가 있었다라는 반증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의원님, 저로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권성동 의원** 국가정보원법에 의하면 국정원장이 정치개입 못 하게 돼 있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못 하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일체 국내 정치사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그런데 박지원 원장과 조 씨가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의혹 보도 날짜를 상의했고 또 뉴스버스에 중요한 자료를 건네준 날이 박지원 원장과 만난 8월 11일 전후해서 일어났고, 두 사람이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동안에 조 씨가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SNS와 인터뷰를 꾸준히 해 왔다는 이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것은 박지원 원장이 개입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로서 대통령께 건의해서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아마 박 원장께서 스스로 그런 문제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보면 과거에 박지원 원장이 당 대표로 있던 시절에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알게 된 거고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는 거지 무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만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나온……

(박병석 의장, 정진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권성동 의원 조성은 씨가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뉴스 인터뷰에서 자백을 했고 실토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지원 원장이 누구입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자기가 정치적 계승자라고 자처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문당했던 분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박지원 원장이 원래 좀 음습하고 음흉한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이런 식의 노골적인 정치개입을 하고 정치공작을 해서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저는 사퇴함이 맞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건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낙 의원님이 가정을 해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권성동 의원 그러니까 윤석열이 사주했다라고 주장하려면 앞에서 열거한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지십시오. 그러면 윤석열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그것은 의원님……

○권성동 의원 왜 답변을 못 해요? 자신이 없으니까……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증거도 없고 그냥 의혹 제기만 하면 대수입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믿을 국민이 있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런 어리석은 행위로 대권을 다시 연장하려는 이런 음모를 꾸미는 민주당이야말로 저는 석고대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 인터넷 매체에서 시작된 의혹 보도는 이제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제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수상한 관계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언론보도 시기를 상의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들의 만남 전후로 보도의 근거가 된 자료가 대량 전송되었습니다. 고발 사주로 위장한 국정원장 주도의 대선 개입, 불법 정치공작 사건입니다.

민주당과 검찰, 공수처, 국정원이 모두 가세한 목적은 오로지 윤석열 죽이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얕은 생각을 버리고 실체적 진실을 빨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공작으로 흥한 정권, 정치공작으로 망합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판단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부의장 정진석 권성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동안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덕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진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안양시동안구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덕입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을 위시한 정치검찰에 전쟁을 선포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검찰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기문란에 대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저는 고발사주 사건의 고발장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정치검찰의 공작을 낱알이 밝히고 그 대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국무총리 김부겸 예.

○민병덕 의원 저에게 왜 그렇게 검찰로부터 미움을 받고 탄압을 받느냐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마는……

○민병덕 의원 PPT 1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고발장의 내용입니다. ‘결국 황희석·최강욱·민병덕은 민변 출신이고 <민병덕 발

검찰 때리기 방송, 보도>가 이뤄지면 황희석·최강욱이 이를 그대로 받아 확대·재생산하는 역할을 했고…… 유시민 역시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변 소속입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달에 21대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압을 받는 겁니다.

PPT 2번 보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변호사로서 검사들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했고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체보자 X의 변호인 활동을 했고요.

민변에서는 정치개혁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역할을 했고 그리고 총선에서는 계속 검찰개혁에 대해서 공약을 내걸었었습니다.

결국 보면 검찰은 자신의 조직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발장을 써 가지고 선거에서 낙선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아직 지금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민병덕 의원 만약에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총선 직전에 기획 고발을 하려 했다면 이것은 검찰발 총선 개입, 검풍사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사실이라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민병덕 의원 검찰의 속성상 지휘 책임자가 모를 수가 없고 몰랐다면, 만약에 몰랐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그런 국기문란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이게 가정으로라도 말씀드리기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은 국가조직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특히 또 공무원으로서 이런, 대놓고 소위 정치개입 행위가 되는 건데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중대한 범죄행위가 되는 거겠지요.

○민병덕 의원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검찰의 쿠데타라고 저는 보입니다.

PPT 3번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인데요, 237조 2항에 보면 검사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에 징역 1년에서 10년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조직적 범죄행위를 만약 했다면 그리고 총장 시절에 윤석열 후보가 지지를 했던 사안이라면 어떻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의원님, 이렇게 가정을 근거로 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민병덕 의원 예, 맞습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특히 정부를 대표해서 나와 있는 입장에서……

○민병덕 의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앞으로는 시도조차 못 하도록 정말 강한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만약에, 만에 하나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뭐 워낙 엄청난 사건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강을 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병덕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민병덕 의원 지난 월요일에 법사위 긴급현안이 있었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민병덕 의원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관계 규명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추가로 밝혀진 게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더 소상한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 점을, 이미 공수처에 의한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어서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병덕 의원 대정부질문이니깐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법무부장관 박범계 아무튼 뭐 오늘도 압수수색이 재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수처에 의해서, 대검에 의한 진상조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 좋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고발장 누가 작성했느냐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느냐…… 예, 물론입니다.

○민병덕 의원 그 고발장에 실명 판결문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명 판결문을 열람했던 사

람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그렇게 추정함이 마땅합니다.

○민병덕 의원 그러면 열람기록이 당연히 남아 있을 텐데, 이것은 수사상 어려운 일이 아닌데 수사됐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열람기록이 당연히 남아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그러한 수사 내용을, 경과를 다 낱알이 밝히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병덕 의원 PPT 4번 보겠습니다.

고발장이 전달된 경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관님 보시면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의 내용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이분들이 피해자입니다’ 그런 취지의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동의나 지시 없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핵심적인 수사대상입니다.

○민병덕 의원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민병덕 의원 범죄에는 범죄 동기가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대체로 범죄의 동기는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민병덕 의원 손준성 검사에게서 김웅 의원에게 갔다라는 것은 물증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이것을 한 이유가 윤석열 총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글썄요, 뭐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민병덕 의원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다음에요 김웅 의원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검 공안부장 출신의 정점식 의원님 아시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민병덕 의원 법률위원장이었는데요 이분은 누구로부터 고발장을 받았는지 생각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아직 의혹이 다 규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민병덕 의원 저는 이 정도 중요한 사건을 다룰 때는 당 내부에서 어떤 조율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그 점도 역시……

○민병덕 의원 PPT 화면 보면 물음표 부분이 있습니다. 김웅 의원도 정점식 의원도, 이 두 분이 기억이 안 나야 할, 그 정도로 보호돼야 될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들의 선배 검사면서 국민의힘의 고위직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직 당직자가 공안검사 출신의 당직자인데요 그분도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어떻게 지금 수사기관의 몫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가 엄정히 수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 제보자 조성은 씨는 자기가 받아가지고 어디에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점식 의원은 보좌관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정점식 의원이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저는 김웅 의원한테 받았을 수도 있지만 김웅 의원이 아닌 손준성이라든지 또는 다른 검사로부터 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규명해야 될 지점입니다.

○민병덕 의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요. 김웅 후보가 제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대검에 접수하라. 중앙지검은 안 된다’.

그런데 당시 조 모 변호사,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인데 이분이 최초에 쓰기는 어떻게 썼냐면 서울중앙지검을 관할로 썼습니다. 그런데 미통당에서 제출된 서류에는 대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아무튼 여러 의혹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민병덕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당 내부에 대해서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뭐라고 제가……

○민병덕 의원 저는 매우 답답한데요. 정치검사들의 이런 부당한 정치공작이 비단 저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이재명 도지사, 우리의 유력한 대권후보지요, 그분에 대해서도 표적수사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 전에 KBS 보도로 나왔습니다.

저나 이재명 도지사 그다음에 황희석, 최강욱, 이렇게 많은데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지인과 가족들까지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장관님, 우리 당의 대권 유력 후보에 대해서 표적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감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지금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기다려 봐 주시지요.

○**민병덕 의원** 감찰을 개시한 것은 아닌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감찰 수준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진상조사 차원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 장관님, 저 민병덕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 황희석, 최강욱 의원 정치검찰이 먼지털이식으로 탈탈 털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저도 검찰의 표적수사로 정말 말 못 할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가족들과 부둥켜안고 운 적도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어떻겠으며 황희석, 최강욱은 어떻겠습니까? 변호사인 저희들이 이런데 비법률가인 일반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감찰이 무섭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바로 그런 지점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민병덕 의원** 예,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딱 한마디로 하면 검찰의 권력은 나누어지고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원론적으로 동감입니다.

○**민병덕 의원**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필요한 거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검찰개혁의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공감을 표합니다.

○**민병덕 의원** 두 번째는 민주적 통제인데요. 선진국에 지방 검사장 직선제와 같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좀 오래된 문제제기입니다. 과연 대한민국헌법하에서 총장이나 검사장의 직선제가 헌법 조화적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병덕 의원** 국민들은 오늘 법무부장관님이 나오시면 지금의 수사 과정 중에서 정말 의혹이 있는 핵심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해 주시리라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핵심은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고 그 고발장이 국민의힘 당에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똑같은 고발장이 실제로 접수됐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당에서는 어떤 경위로 됐는지 이 두 가지만 밝혀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민병덕 의원님,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수사진행 속도나 상황 그런 것이 결코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답답한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에 의한 수사 또 검찰에 의한 진상조사를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민병덕 의원** 제가 속이 터져서 하는 말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을 당했는데 책임을 져야 될 당에서는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명심하겠습니다.

○**민병덕 의원**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민생과 관련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예정된 코로나 만기 대출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예, 9월 말이 만기입니다.

○**민병덕 의원** 제가 소상공인들을 만나 보면 가장 큰 걱정이 그거였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장사도 못 하는데 그 만기가 와 가지고 갚으라고 하면 파산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지금 두 차례의 만기 연장을 해 주었는데요.

○**민병덕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지금 아직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요일 정도인가 목요일 정도에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대책회의를 통해서 여기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밝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 거기에 꼭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대출 만기연장 들어가야 되고 원금 상환유예

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자 상환유예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여하튼 의원님의 그런 현장을 살피신……

○민병덕 의원 그것은 저의 부탁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오는 절절한 얘기입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의원님께서 전해 주시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경제관계장관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덕 의원 총리님, 코로나로 인한 행정명령 때문에 손실보상해야 된다는 법이 입법되었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민병덕 의원 10월부터나 손실보상이 되기 시작합니까? 언제부터 됩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7월 7일 이 법 공포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저희들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세세한 준비를 해서 가능한 한 이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바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 워낙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고 또 개개인의 피해 정도라든가 이런 것 산정에는 아무래도 서로 간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가능한 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 시행령도 만들어져야 되고 보상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야 되고……

○국무총리 김부겸 그렇습니다, 물론.

○민병덕 의원 그리고 손실을 측정하는 기준도 마련되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관계 전문가들하고 또 피해 당사자들 이런 분들의 의견이 접수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병덕 의원 그래서 언론에는 10월 말 정도로 나오던데요 제가 보기에 10월 말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소상공인들한테 지급되는 시점 말입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 부분은, 예를 들면 업종 평균이나 이런 걸 정해서 전체 예상 금액의 한 반 정도는 선지급을 한다든가 그런……

○민병덕 의원 맞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 준 것이, 지금 1조가 이미 확보돼 있는 것 아

닙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민병덕 의원 그래서 시행령 만들어지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만들어지고 그리고 측정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절반 정도라도 선보상하고 그리고 정확한 기준 세워 가지고 후정산을 한다면…… 정말 소상공인들은 지금 급합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아마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병덕 의원 선보상 후정산이 필요합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업종별 어떤 평균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면 아마 그렇게 가능한 한 빨리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지금 중기벤처부의 입장이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병덕 의원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덕 의원 들어가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일부 국민들은 벼랑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정치권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치검찰의 공작이 드러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검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장을 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 정치검찰이 공작만 하던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니다. 정치권이 정쟁의 회오리로 다시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에는 제발 끝장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번에 이 정도 되면 검찰당의 존재가 밝혀진 것 아닙니까? 여야가 있는 게 아니라 검찰당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검찰당을 해체해야 되는 수준 아닙니까?

국민의힘에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범죄행위는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로부터 받은 고발장과 유사한 국민의힘 명의의 고발장이 있습니다. 밝히면 될 일입니다. 직접 밝히면 될 일이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십시오. 공당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부의장 정진석** 민병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출신의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진석 국회의장의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밀양시의령군창녕군함안군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해진입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장관님, 공수처 이것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조해진 의원** 출발할 때부터, 탄생할 때부터 공수처법이 일방 처리된 절차적인 문제를 별로요 하더라도 이 공수처는 잘못 태어난 기구고 돌연변이입니다. 헌법에 근거가 없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위헌적 기관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라고 하기에는 그동안 보인 행태가 너무 수준 이하입니다. 황제 의전, 정실인사, 사건 공개기, 허위 보도자료,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함량 미달의 한심스럽고 창피한 기관입니다.

이제는 이 법을 또 이 기구를 추진했던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여야 모두한테 ‘공수처 뭐 하러 우리가 만들었지?’ 존재 이유가 의심받는 기구로 전략을 했습니다. 이제는 위상이 땅바닥에 추락되니까 그걸 어떻게 세워 보려고 고발장 사건에서 어설픈 공작수사 흉내 내다가 불법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제 거꾸로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으로 됐습니다, 공수처가. 이래도 이 기구를 둘 이유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글쎄요, 위헌적 기구라는 점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새로운 형태의, 현대적 삼권분립 이론에 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기구고, 지금 존재가 의심스럽다는 말씀이 있는데 신생 기관으로서 다소 이러저러한 산고를 겪은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는 상당히 안정화돼서 적어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그러

한 기관으로 거듭나려는 모습은,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조해진 의원**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브리핑에서 ‘언론에서 수사하라고 해서 수사했다. 죄가 있고 없고는 그다음 문제다’, 이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입니까? 그리고 ‘범죄혐의를 포착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 풀어나가야 된다’ 그레놓고는 ‘윤석열 범죄혐의’ 하면서 죄명까지 4개를 또박또박 적시를 했어요. 이게 말입니까, 망발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어찌 됐든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발부가 됐습니다, 조 의원님. 압색영장은 범죄의 정황 그리고 대상 압수수색 물건이 당해 사건과의 연관성 이런 것이 있어야지 발부되는 건데요. 그런 지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조해진 의원** 압색영장에 대해서는 준항고 신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받아들여져야 저는 법원이 제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사후에라도 잘못 압색영장 발부한 것에 대해서 바로 잡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공수처가 하는 행태를 보면 아무나 잡아들이는 기관인가 싶어요. 죄 없는 사람 죄 만드는 기관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언론에서 수사하라고 해서 수사했다고 하니까 얼른 제가 생각 든 게 언론에서 그동안 수도 없이 문제인 대통령에 대해서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월성원전 불법 폐쇄 사건 등 수많은 사건마다 ‘몸통이 문제인 대통령 아니냐? 수사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계속 지적해 왔는데 왜 조사 안 하는지, 여당 대선후보님들도 피고소·고발 사건들 많은데 왜 조사 안 하는지 그리고 이번에 고발장 사건 좀 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있었습니다마는 그 배후에 공작 의심받고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은 왜 조사 안 하는지.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공수처가? 왜 한 입으로 두말 한다고 보십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관심이 아마 박지원 국정원장 부분이실 텐데요 본인께서 헛다리 짚는 것 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 됐든 고발이 됐으니까 그 부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저는 수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해진 의원** 여당 보좌관 출신 검사를 배당하는 그런 공수처입니다, 사건 배당하는 공수처입니다. 압색 과정에서 불법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건 건져서 이 정권에 보은하려고 공작수사 흉내 내다가 탈 난 것 아닌가 싶어요. 공수처 빨리 수사받고 저는 해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조해진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어렵습니다.

○**조해진 의원** 고맙습니다.

총리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참 대선 오래 제가 봐 왔는데요 대통령선거가 다시 투기장화되고 있고 이전투구판, 네거티브 선거판, 마타도어판, 묻지 마 흑색선거판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봐 왔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고 그대로입니다.

인터넷에서 의혹 하나 제기하니까 정치권이 별 때같이 들고 일어나서 총공세를 펴니다. 말은 ‘사실이라면’ 하고 가정해 놓고 그 뒤에 하는 이야기를 보면 사실로 단정해 놓고 낙인찍기에 집단적으로 나섭니다.

국기문란이다, 국정농단이다, 범죄자다, 조폭두목이다, 수사받아라, 후보 사퇴해라…… 이것은 사실로 확인해 놓고 나올 수 있는 말들이, 인터넷 기사 하나 가지고 ‘사실이라면’ 전제를 달아 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진상도 모르면서 그런 식으로 공격한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스스로.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조금 국민들이, 정치권 자체가 조금 그런 점에서 미래를 향한 건강한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해진 의원** 박범계 장관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실이, 기냐 아니냐, 진실이나 거짓이나 규명되는 데 시간 별로 안 걸립니다. 의혹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그때 가서 법적으로 평가하고 정치적으로 평가하고 또 단죄하고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평가할 겁니다.

그런데 안 기다립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프레임을 걸어 가지고 덮어씌워야 한다고 보고 마구 달려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그래도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립된 국가기관들이 의원님이 우려하시듯이 그렇게까지 경우에 맞지 않게 일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저는 뭐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아까 법무장관이 답변드린 대로 조금, 상황은 어떤 형태로든지 곧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 문제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조해진 의원** 총리님, 제가 말씀드린 건 국가기관, 물론 국가기관도 사실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정치권 그리고 일부 언론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나중에 조만간에 이게 무혐의가 되거나 결백으로 확인돼도 그 기간 동안 정치적 공세에 의해서,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낙인찍히고 잔상이 생긴 건 그래도 그대로 남는 겁니다. 그걸 노리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국민들 머릿속에 어쨌든 간에 이 기간 동안에 진실이 규명되기 전까지 정치공세로 부정적인 선입견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그래서 그 점은 언론도 책임을 느껴야 되고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아마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조율 중인 언론중재법에도 바로 이러한 풍토를 한번 바로잡아 주자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해진 의원** 지금 선거가 제가 보기에는 민주적 통합 과정이 아니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기기만 하면 최고라고 하는 그런 결과지상주의, 승리지상주의의 투기판, 투전판이 돼 가고 정치권이 그쪽으로 막 몰려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이런 식으로 뽑는 것 저는 망국적인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우리 정치권 스스로 우리의 정치적 정통성이나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폭 행위라고 생각하고 국가적인 자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이런 식으로 돼 가서는 안 되고요.

총리님께서 모범적으로 선거관리 총책임자시니까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여야 간에, 각 당의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은 워낙 많은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후보들이 결정되거나 하게 되면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들은 좀 정리가 되지 않겠냐, 특히 정부도 그런 점에서 국민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자체가 조금이라도 영향받지 않도록 선거관리에 그

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조해진 의원 총리님!

○국무총리 김부겸 예.

○조해진 의원 21대 국회 전후해서 민주당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식 이하의 법안들이 마구 제출됐는데 그때 저는 일부 강경한 분들이 강경 지지자들을 의식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내 보는 거겠지 생각을 했지 실제로 법을, 입법을 추진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법인가 싶은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마구잡이로 통과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청와대가 빨리 처리하라고 독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겁니다. 공수처법, 선거법, 대북전단법, 사립학교법,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언중법, 다 줄줄이 그런 법들인데 이 법안들이 야당을 배제하고 강행처리로 통과됐다는 점에서는 절차적으로도 입법독재 법안이지만 내용적으로도 위헌이 수두룩합니다. 민주주의자라면 절차상, 내용상 절대 할 수 있는 입법이…… 우리 국회에서 마구잡이로 저질러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시절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분들 진짜 민주화운동한 건가, 아니면 민주화운동을 가장한 전체주의자들이었나, 아니면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됐나, 그것도 아니면 마음 속에 민주주의의 열망을 갖고 있지만 소수 전체주의자들한테 눈치보면서 부화뇌동하고 있는 건가 혼란스럽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의원님,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 모든, 어떤 소소한 그런 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봉하는 민주주의와 또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에 대한 아주 단단한 믿음과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하나하나 극복되리라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조해진 의원 저는 그 믿음이 마구 흔들리고 있어서 혼란에 빠졌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도 국회에는 그런 반민주 악법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이 반민주 악법들에 대해서 마지막 통제장치인 헌법적 통제까지도 무력화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까지 코드인사로 견제기능을 미리 거세를 해 봤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이런 반민주 악법들이 제동이 걸릴 장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권 폭주가 이렇게 가면 입법 쿠데타

를 통한 전체주의 국가화가 저는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치 독일도 아시는 것처럼 수권법이라고 하는 위헌법률을 가지고 바이마르 헌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나치 일당 독재, 전체주의 그걸로 완성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수권법 같은 그런 법안이 우리 대한민국국회 21대에서 추진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다고 보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김부겸 의원님,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신들 스스로의 손으로 권력교체도 정권교체도 했고 또 그 권력이 자신들의 기대를 배신할 때는 권력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권력자 축출도 해 본 경험이 있는 국민들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어떤 경우에 어긋나거나 혹은 민주주의의 원리 혹은 민주공화국의 가치에 반한다 싶으면 그 국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의원님, 그래서 너무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조해진 의원 이미 많은 법이 통과돼 버렸습니다. 그것 제동이 안 걸렸습니다.

질의했던 과정에서 언론개혁, 검찰개혁 필요성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 검찰개혁은 진정성이 없어서 동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용도 문제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몇 년 전에 세월호·탄핵사태·적폐수사 때에는 온갖 가짜뉴스가 난무했습니다. 아시지요? 박근혜 대통령 그때 세월호 때 호텔에서 누구 만났느니 관저에서 굶을 했느니 온갖 거짓뉴스들, 그때 민주당은 그걸 방치했습니다. 오히려 활용했습니다. 제 눈에 즐기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가짜뉴스 그리고 그 당시의 검찰의 과잉수사 그걸 활용해 가지고 그 힘으로 탄핵 밀어붙이고 적폐수사하고 전직 대통령 두 분 감옥까지 가게 했습니다.

이제는 불리하니까, 개혁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개혁이 아니고 언론이나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걸로 보입니다.

이 언론중재법, 절차도 문제지만 내용적으로도 언론의 본질적 자유를 침해합니다. 동의 못 합니다, 내용적으로도.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로 처리하고 안 되면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양심적 민주주의자 의원님들이 중심을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 같이 다 망합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의원님, 그래서 지금 8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토론도 하시고 또 말하자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안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조금 더 지켜보시지요, 국민들하고 약속한, 여야가 약속한 시간이 있으니까.

○**조해진 의원** 총리님이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조해진 의원** 감사합니다.

전해철 행안부장관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민족문제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예.

○**조해진 의원** 거기가 국가기관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국가기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해진 의원** 정부가 민족문제연구소에 친일 문제에 대해서 유권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정부가 부여한 것은 아니지만요, 다만 상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조해진 의원** 국가기관도 아니고 유권해석 권한도 부여한 적이 없는데 왜 정부기관들이 친일 판정 문제에 관해서는 민족문제연구소의 판단을 금과옥조로 받들고 있습니까? 왜 정부가 민족문제연구소를 국가가 공인한 친일 감별사처럼 대우를 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제가 어떤 사안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지 구체적인 사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민족문제연구소가 그동안 친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인 합의 내지는 사회적으로 공신력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당한 근거를 제시했던 것들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해진 의원**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문제제기한 게 아니고요. 정부기관들이, 보훈처를 비롯해서 심지어 행안부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민족문제연구소에 공식적으로 조회를 하고 회의를 부탁하고 답변을 들어서 거의 그대로 결정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더 못

드리겠지만 저는 이것은 정부가 미필적 고의로 사실상 민족문제연구소에 공적인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국민들이 국가기관인 줄 알아요. 그리고 민간 사설단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 깜짝 놀랍니다.

모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안에서 저희들이 용역이나 의견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친일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민족문제연구소가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어서 그런 의견 제시를 듣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의견을 들을 때 민간이라 하더라도, 민간 연구소라 하더라도 의견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조해진 의원**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에 기회되면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항일운동가들의 상당수가 사회주의 계열이었고 공산국가를 건립하려고 추구했던 분들입니다. 그런 시도가 북한에서는 성공했고 남한에서는 실패했는데 남한마저 성공했으면 우리 한민족은 폭망했을 겁니다. 집단 멸망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반도의 사회주의 공산화를 위해서 항일운동한 사람들, 일제를 몰아내고 거기에 공산국가를 세우려는 이상을 가지고 항일운동한 사람들도 항일운동으로 인정해 줘야 되느냐, 그 질문 좀 여쭙보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여러 이야기도 돼 있고요. 역시 구체적인 사안이 아니어서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몇 가지 논란이 됐던 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게 보훈이라든지 훈장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사회적 여론을 잘 모아보고 또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해진 의원**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다음에 기회되면 장관님과 또 다시 한번 토론하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알겠습니다.

○**조해진 의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낙연 후보님, 윤희숙 후보님이 의원직 사퇴 외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분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느냐? ‘대한민국 대통령 아무나 해도 되나? 대한민국은 도

덕적 파탄자가 대통령 해도 되는 나라인가?’ 피토하는 심정으로 두 분이 국민 여러분께 도발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에 국민 여러분이 ‘정치인이 다 그렇지. 그놈이 그놈이지. 대충 굴러먹고 살아온 놈들인데 누구를 뽑은들 무슨 차이가 있나. 그중에 아무나 뽑으면 되지’ 하고 대통령을 뽑으면 대한민국은 그렇게 굴러먹는 나라가 됩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바로 뽑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진석** 조해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대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진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 국회의원 양기대입니다.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생존의 벼랑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과 절망 앞에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당은 국민의 관심사인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진상규명에 협조하기는 커녕 뻔한 정쟁화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또 관련 사안에 대해서 공수처와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양기대 의원** 당당하고 소신 있는 답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이상하고 회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이 중차대한 사안의 중심에 있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 정점식 의원,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손준성 검사, 국민의힘 지도부, 모두 한결같이 기억나지 않는다, 관련 없다, 정치공작이다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또 사건을 정쟁으로 몰아가면서 본질을 희석하고 또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검찰총장과 측근 검사가 야당

과 내통하여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여권 인사를 고발토록 했다는 이런 해괴한 의혹은 듣도 보도 못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끔찍한 사안입니다. 이런 의혹이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심각한 민주주의의 파괴행위이며 검찰에 의한 초유의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검찰이 국민들께 그동안 개혁의 대상으로 그렇게 평가되어 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검찰 자체의 비위도 있었지만 소위 역대 권력과 유착 혹은 정치적 중립성의 일탈 그런 부분들이 가장 컸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진상이 규명돼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해도 대단히 중차대한 사건이고 검찰 조직 일부와 정당 간에 혹시 유착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 그리고 우려가 매우 큰 사건입니다.

○**양기대 의원** 지난 10일 공수처가 김웅 의원 사무실, 손준성 검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직권남용 등 4개의 혐의를 적용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공수처와 법원이 확실한 정황이나 근거가 없었다면 이렇게 결정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압색영장은 그냥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정황과 사건과의 연관성,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 발부됩니다.

○**양기대 의원** 이번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김웅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이들 두 사람과 그 주변 인물들을 보면 사건의 실체를 짐작할 만한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김웅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손 검사는 김웅 의원에게 문제의 고발장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손 검사의 장인은 국민의힘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 당시 국민의힘 총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김웅 의원은 동기인지 몰랐다, 누가 보냈는지 모른다, 확실하지 않다, 헛갈린다, 전달만 한 것 같다고 오락가락 해명을 죽 해 오다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는 손준성 검사에게 ‘총장이 외로운 상황이라 들었다. 나라도 잘 보필하고 힘내라’라고 격려 문자를 보낸 것은 시인을 했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뭔가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상황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사실관계를 지금 규명하는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좀 기다려 주시지요.

○**양기대 의원**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서 고발장을 전달했을 개연성은 매우 높습니다. 대검은 제보자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손준성 보냄’ 메시지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4월 8일 김웅 의원이 받은 고발장과 실제로 그해 8월 국민의힘 측에 의해 작성되어 고발된 최강욱 의원의 고발장이 몇몇 문구를 제외하고 오류까지 똑같다는 점에서 국민의힘도 이번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는 공수처와 검찰이 적어도 이 두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윤석열 당시 총장이 몰랐을까 하는 그런 국민적 의구심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오늘도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매우 특별한 관계다.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여러 증거가 있는데 지금은 밝히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가 정말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장관께 묻습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양기대 의원님, 우리 검찰 역사에서 범정이라는, 범죄정보정책관이라는 오랜 제도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문무일 검찰총장 때 범정을 폐지하고 일선에 파견된 IO들을 다 불러들이는 등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것은 수사정보 외에는 다른 동향정보나 그 밖에 불필요한 정보를 다루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이고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송구스럽게도 전임 총장 시절에 지금 의혹의 핵심인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부임을 한 이후에 말 그대로 판사 사찰 문건이 작성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징계논의가 이어졌고요 서울행정법원에 전임 총장에 대

한 징계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검찰의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장관으로서의 걱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포함해서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복기가 필요하다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기대 의원**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해 보면 지난 4월 당시 손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문제의 고발장 2건, 그 전달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최소한 인지라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손준성 검사가 독자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윤석열 후보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은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장 의원은 윤 후보가 진짜 고발이 필요하다면, 그 당시 법률 지원 관련된 책임자가 정점식 의원입니다. 윤 후보와 정점식 의원은 가장 가깝습니다. 그분에게 전달해서 바로 고발하는 것이 맞지 왜 건너 건너 이런 짓을 하느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정점식 의원실에서 최강욱 의원 고발장을 당무감사실에 보낸 뒤에 변호사에게 전달되어 고발이 실제 실행이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제원 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해석하면 지난해 8월 최강욱 의원 고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정점식 의원 간에 어떤 형태로든 교감이 오갔을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진상규명의 대상입니다.

○**양기대 의원** 본 의원은 윤석열 캠프에서 공정과상식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의 당시 역할과 윤 전 총장의 직접 개입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겠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당연히 진상규명 대상입니다.

○**양기대 의원** 이 사건 제보자에 따르면 김웅 의원은 고발장을 주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에 고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김웅 의원과 윤석열 대검 간에 모종의 사전교감이 있었을 거란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앞서 쪽 살피본 바와 같이 윤석열 검찰총장, 손준성 검사, 정점식 의원 그리고 김웅 의원의 커넥션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의 몸통이 누구인지 짐작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서는 몸통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이제 수사가 시작됐고 또 대검에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역시 한번 지켜봐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기대 의원**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 더 드립니다.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이 터지자 국민의힘은 수사 협조를 거부하면서 야당 탄압, 정치공작이라는 말로 몰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의혹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털어낼 것은 과감히 정리하는 슬기로운 모습을 보여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관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진상이 규명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명심하겠습니다.

○**양기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겸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고생 많으시고요.

민생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인천,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국 5개 도시철도 노조가 내일 14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자체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총리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사실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어렵고 민생들이 힘들 때 진짜 서민들의 발인 지하철이 파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너무 큰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노조 측과 사측 양측에 다시 한번 진지한 대화와 타협을 촉구하고, 특히 서울교통공사를 뒤에서 감독해야 될 책임 있는 서울시 또 인천시가 이 문제는 직접 나서서 타협을 시켜 주기를, 파업을 막아 주기를 요청합니다.

정부로서는 최악의 경우 파업이 될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양쪽, 서울시와 또 인천시 쪽에서는 당사자가 돼서 직접 나서라 이렇게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양기대 의원**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구제와 언론의 자유 둘 다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도 그런 핵심 쟁점사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법이 발의가 되고 또 지금까지 진행돼 왔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러면서도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국민적 걱정이 있어서 지금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가 가동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토론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이 법이 왜 필요하고 또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서로 여야 간 대화가 다시 시작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알려져서 마침내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기대 의원** 가짜뉴스와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국민의 일상과 명예가 짓밟히는 사례를 수없이 봐 왔습니다.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안에 포함된 열람차단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 등의 조항은 그런 요구를 반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7일 여야가 합의해서 구성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에서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 언론계에서 문제를 제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문제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쟁점사안을 중심으로 하여 피해자 구제와 언론의 자유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담을 타협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생각한 방안은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의원님, 저도 전적인 동의를 하고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든 모아서 해야 될 입법자의, 입법부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 주셔야만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언론 자유라는 헌법상 본질적 가치는 우리가 보호를 하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국민들의 일상적인 피해를 그냥 개별적인…… 내버려 둔다는 것은 또 공정한 사회의 원칙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번에 잘 타협이 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쟁점 문제에서도 상

당한 정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 수준의 타협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기대 의원 여기에 대해서 가짜뉴스 규제 참시급합니다. 아마 총리께서도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유튜브를 포함한 일부 1인 미디어에 의한 가짜뉴스 폐해가 심각한데 이것을 이번 법안에 담을 각오로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이번 법안에는 못 담기더라도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다음 우리 공동체가 맞닥뜨린, 사실은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어떤 상처를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양기대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피해구제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언론중재법에 언론의 자정 노력이 더해진다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언론으로 다시 거듭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언론인 출신의 본 의원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이번에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언론중재법안의 좋은 결론을 내도록 힘을 모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부의장 정진석 양기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출신의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熙國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진석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김희국입니다.

풍성하고 행복해야 할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삶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값은 다락처럼 올라 버려 내 집을 사겠다는 희망은 절망이 되었고 계속되는 거리두기는 많은 사람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정부가 발전소 짓겠다고 원전지구로 지정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지원금도 빼앗아 가 버렸습니다.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대한민국헌법 제86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부를 통할하도록 되어 있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熙國 의원 지금은 총리께서 정치보다는 민생에 훨씬 더 치중해야 될 시점이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金熙國 의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한 달 수입은 얼마나 되고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계시고 있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제가 아주 더 세세하게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마는 우리 국민들의 삶이, 여러 가지 경제성장이라든가 또 세계적인 한국 경제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이 그렇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金熙國 의원 보통 사람들은 밥 먹고 잠자고 아이 키우고 노후 대비하는 것이 인생의 거의 전부이고 그중에 밥을 먹을 수 있는 일자리와 가족이 쉬고 지낼 수 있는 잠자리, 이 두 가지 자리가 대단히 중요하겠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주거와 일자리.

○金熙國 의원 그런데 일자리는 청와대에 상황판 만드는 그날부터 이상기류를 타 버렸기 때문에 주택과 소득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표를 잠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대한민국은 5180만 명이 2093만 가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의원님, 한 40%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熙國 의원 수도권은 절반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70% 이상이 주택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고 나왔는데요 그 불만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결국은 내가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집값이 뛰고 나면 내 집 마련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내 자식한테도 이런 주거 없는 주거 불안을 대물림하지 않겠냐는 그런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金熙國 의원**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는군요.

우리나라 2000만 가구의 평균 집값은 얼마 정도입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전국적으로 말입니까?

○**金熙國 의원** 예,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전국적으로는 보니까 아파트 기준으로 한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정진석 부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金熙國 의원** 그렇습니다.

서울시 상위 20%는요? 지난번 자료에 드렸는데 20억입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20억, 예.

○**金熙國 의원** 그렇습니다.

5억 대 20억입니다. 5억 대 20억은요…… 4년 전만 하더라도 3억 대 육칠억 정도 됐습니다. 집값 차이가 4년 만에 2배에서 4배가 돼 버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예.

○**金熙國 의원** 넘사벽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넘사벽? 사전에도 나오는 용어입니다. 넘사벽.

○**국무총리 김부겸** 넘지 못할 뭐 그런 약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熙國 의원** 그렇습니다.

이 말은 3억에서 6억 정도는 어느 정도 도달 가능성이 있는데 5억에서 20억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는 그런 의미로 넘사벽입니다. 국민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는 부동산 폭등이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예.

○**金熙國 의원** 지난번에 종부세법 개정된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예.

○**金熙國 의원** 종부세 개정으로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 종부세 내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지난번에 나온 걸로 보면 약한 25만 가구 정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金熙國 의원** 총리님, 종부세 대상을요 처음에는 52만 명 낸다 하다가 어떤 의원이 국민 2%만 물리도록 해서 28만 명 낸다 하다가 결국에는 9만 3000명이 내게 됐습니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말 아시지요? 종부세로 집값 잡는다고 난리를 쳐서 큰

폭탄이 떨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 보니까 쥐가 한 마리 죽어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9만 3000명이네요.

○**국무총리 김부겸** 집값 잡는다고 보다는 조금, 어떤 형태로든지 그만한 정도 자산의 증가분에 대한 일정 부분 사회적 환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시작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부세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정부는 좀 우려를, 종부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까……

○**金熙國 의원** 저도 동의합니다. 세금 내는 게 특권이 되는 나라가 돼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또 그만한 존중을 받는 나라가 돼야 되겠습니다.

○**金熙國 의원** 이 과정을 살펴보면요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에서 11억 원으로 올리고 여당이 당당하게 설명한 것처럼 공제기준도 3억에서 5억으로 늘려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종부세 대상이 이십수만 명이라고 이야기되다가 9만 3000명이 된 겁니다. 이래 가지고 집값 잡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저는 시장에 조금 잘못된 신호가 갔지 않았느냐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金熙國 의원** 지난 4년간 수도권, 서울이 아니고요 수도권 집값은 얼마쯤 올랐다고 보고받았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50% 이상 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熙國 의원** 총리님 생각에 집값은 누가 올렸고 지금까지 책임진 분이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역시 여러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제일 큰 원인은 좀 공급이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결국은 최근에 전 지구적인 유동성 과잉도 분명히 하나의 역할을 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건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집값이 요새 오르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우리 사회의 집 가진 분들이 갖는 여러 가지 또 뭐랄까 특권이라 할 이런 부분들도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熙國 의원** 한 장의 사진을 보시지요.

네 분의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이지요, 총리님?

○국무총리 김부겸 예, 이쪽 제일 오른쪽 분이 제가 잘……

○金熙國 의원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이 인물들 중에서 누가 부동산정책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의원님, 특별히 제가 어느 누구 한 개인에게 이 문제의 책임을 물어서 이 문제가 잘못 풀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金熙國 의원 총리님, 정책은요 구상하는 사람이 있고 설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집행을 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당연히.

○국무총리 김부겸 예, 그렇게……

○金熙國 의원 우리가 작전을 실패하면 누가 작전을 구상했고 누가 작전을 지휘했고 누가 작전을 시행했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金熙國 의원 국민적인 재앙이 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총리께서 책임자를 잘 모르겠다고 답변해 버리면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국무총리 김부겸 그게……

○金熙國 의원 그러면 거꾸로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인물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의원님, 부동산정책을 다뤘던 세 분 자체가 지금 현재 그 위치에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와서 다시 제가 누구 책임이 더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金熙國 의원 그러면 지금 현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과 각부 장관이 있는데 현 이 정권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우리 모두 다가, 지금 내각 모두 다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金熙國 의원 총리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정권이 명멸했지만 이렇게 부동산 문제 때문에 격차를 만든 정권이 없었습니다. 국민들한테 사과하십시오.

○국무총리 김부겸 그 점은 국민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상처를 드리고 있고 또 이것이 어찌 보면 이렇게 자산격차를 너무 크게 함으로써 젊

은 세대들한테 많은 좌절감을 준 데 대해서 정부행정의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金熙國 의원 위장 이혼이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위장 이혼요?

○金熙國 의원 예, 이혼.

○국무총리 김부겸 예, 위장 이혼은 저희들……

○金熙國 의원 세금 줄이려고 하는 게 위장 이혼입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예.

○金熙國 의원 위장 결혼 들어 봤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일부 언론에서 조금 보도된 것 같은데 아마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

○金熙國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청약통장 가진 사람들이 몇 명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한 이천칠팔백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熙國 의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전 가구 2093만 호보다도 100만여 명이 많은…… 2800만 명이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당첨을 기다리고 있고요 당첨 확률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우니까 젊은 사람들이 위장 결혼을 하는 겁니다. 시대의 비극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예.

○金熙國 의원 임대차 3법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예.

○金熙國 의원 작년에 국회에서 세입자들이 4년간 안정적으로 살고 임대료도 5% 이상 못 올린다 이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기립 투표를 하면서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이거 시행해 보니까 시장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일단 전세 매물이 많이 줄었다, 거기에 따라서 전세금이 많이 올랐다는 그런 현실은 알고 있고요. 물론 소위 재계약률은 높아졌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전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전월세, 월세를 같이 끼고 전세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金熙國 의원 그렇습니다. 세입자는 전세가격을 일억도 아니고 삼사억씩 올려 달라 하니까 목돈을 구할 방법이 없고 또 집주인들은 세금이 올라가니까 이걸 월세로 돌리지 않으면 손해가 너무 나서 반전세가 대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월세로 전환됐을 때 한 달에 월세로 얼마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뭐 다릅시다마는 지금 우리 공급리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熙國 의원 그렇습니다. 국민주택 규모로요 한 달에 1억 보증금이면 200만 원이고, 3억 보증금이면 120만 원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일인당 가구 수입은 얼마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수입 대비 월세는 주거비 폭등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金熙國 의원 우리나라 한 가구당 연 5924만 원입니다. 2.48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1인당 나누면 한 달에 200만 원이 안 되는 겁니다. 2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월세를 오륙십만 원씩 쥐 버리면 교통비하고 밥값 하고 나면 미래 설계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거비 안정 문제는 그냥 단순한 집값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의 생존권, 기본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동산정책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예, 그간 우선 가장 취약한 청년들을 위해서 월세 중에서 한 20만 원까지 한도로 해서 저희들이 우선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金熙國 의원 총리님, 청년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 좋은데요 우리나라 국민 800만 이상이 전월세 살고 있습니다. 그 점을 반드시 명념하셔야 됩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예, 하여튼 의원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서 주거안정이라는 이 절박한 과제에 뭔가 저희들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熙國 의원 주택공급 중 하나라고 갑자기 2월 4일 대책 발표한 3080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예.

○金熙國 의원 3080 대책이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총리께서는?

○국무총리 김부겸 일단 수도권에 30만 호, 전국에 8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라는 정부의 어

떤 정책적 의지를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金熙國 의원 그렇습니다. 3년 내내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다가 금년 2월 4일 날 갑자기 공급을 한다면서 이 정책을 내놨는데요.

동대문구 용두동의 토지소유자들이 저에게 항의 문서를 보냈습니다. 느닷없이 사유지에 LH 중심으로 공공 주도 개발을 한단데 그분들의 말이 ‘내 땅인데 왜 당신들이 들어와서 개발한다는 거야, 나는 동의도 안 했는데! 우리끼리 조합 만들어서 알아서 할 테니까 손떼’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구체적인 어느 지역에서 어떤 항의가 있었는지는 잘 모릅시다마는 공공개발에 대해서 일종의 민영개발을 더 선호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金熙國 의원 총리님, 국토부장관한테 제대로 한번 보고를 받으십시오.

법에도 없는 후보지를 발표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사회주의 정권도 아닌데 행정부에서의 사권 침해라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덜 익은 정책을 들고 오면 경험 많은 총리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는 게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 그런 점에서 의욕이 너무 앞섰던 부분이 혹시 있다면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이 뒤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金熙國 의원 집값 상승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요 정치적으로는 집값 상승이 자산격차를 불러오고 이게 계급격차를 불러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습사회를 만든다고요, 부동산 가격 폭등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고민이 깊습니다.

○金熙國 의원 혹시 지금의 불평등 현실을 다룬 조귀동이 쓴 ‘세습 중산층 사회’라는 책 한번 읽어 봤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저는 읽지 못하고……

○金熙國 의원 한번 읽어 보십시오.

○국무총리 김부겸 예.

○金熙國 의원 90년대생들의 좌절감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책입니다.

둘째는 ‘이생망’이라는 말 들어 봤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예, 알고 있습니다.

○**金熙國 의원** 국민 70%가 이번 생에는 망했다고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넘사벽과 똑같은 의미이지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金熙國 의원** 영덕 원전지구 지정취소 사건 보고받으셨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예, 알고 있습니다.

○**金熙國 의원** 2012년도에 영덕군민들한테 ‘당신들이 원자력발전소 유치하면 380억 지원금 주겠습니다’ 이렇게 사정사정하듯이 해 가지고 수많은 찬반투표 끝에 영덕군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서는 어떤 원인행위도 설명 안 하고 ‘지정을 취소한다. 380억 반환해라. 반환 안 하면 법정금리 물리겠다’ 이렇게 공갈까지 쳐 가지고 380억 뺏어 가 버린 겁니다.

총리님, 정부가 이래도 됩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의원님이 누구보다 행정을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텐데요. 의원님,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경위야 어쨌든 영덕군민들한테 여러 가지 안타깝고 또 상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 행정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원인이 소멸되었으면 일단은 반환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에 어떤 형태로든지 바로 영덕군민들이 느끼는 안타까움과 박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은 마련하겠습니다.

○**金熙國 의원** 총리님, 우리나라 민법 2조 신의성실의 원칙이 권력남용과 양대의 기본이고 사인간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예, 그래야 최소한도의……

○**金熙國 의원** 영덕군민들한테 다시 한번 정부의 실책을 인정하고 보상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부겸** 영덕군민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기대했던 바 또 정부의 약속을 믿어 주신데 대해서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절차상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급했던 그런 지원금을 다시 되받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정부 회계처리상 어쩔 수 없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여러 가지 위로가 될 만한 여러 다양한 형태의 정부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金熙國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정권도 벌써 끝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간지에서는 대통령이 퇴임 후 매달 1390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국민들은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도요.

스물일곱 살 난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원님, 저는 월 200만 원 남짓 벌고 그중에 50만 원 저축하는데요 관악구에 30평대 집 사려고 봤더니 11억 원이라서 180년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은 주택 가격을 폭등시켜 젊은이들을 결혼도 출산도 못 하게 만들지를 않나, 사유지에 공공 주도 개발한다고 들이밀지를 않나, 원전 짓는다고 지정해 놓고 멋대로 취소를 하지 않나, 가관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시장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법을 만들고 정책을 세운 사람들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곧 있을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상희** 김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대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대전 대덕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순 의원입니다.

코로나가 국내로 유입된 지 2년이 다 돼 갑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한 봉쇄 없이 방역에 성공한 사례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의 진단과 추적, 치료에서 효율적인 정부 대처와 투명한 정보공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룬 성과입니다.

국민들의 참여 덕분에 백신 접종률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9월 13일 현재 1차 접종률은 64.6%, 접종 완료율은 39.1%로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고 견뎌 주신 국민들과 전국에서 방역과 백신 접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10월 말까지 70% 예방접종 완료 목표가 달성 가능합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지금으로 보서는 별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순 의원 백신 수급도 문제가 없고요?

○국무총리 김부겸 예, 그동안 공급에서 조금 착오를 줬던 모더나사에서 내일 새벽에 9월 공급 물량을, 최종적인 스케줄을 알려 오기로 했으니까요 지금으로 보서는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순 의원 다행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민생경제 활성화와 일상 회복을 위해 코로나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과 싱가포르 등 예방접종률이 높은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위드 코로나 전환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하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서민층이 더 이상은 견디는 데 임계점에 와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방역 전환을 원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총리님, 정부는 위드 코로나 대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 그 개념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면 코로나하고 같이, 완전히 종식시킬 수는 없으니까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취지인 건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라는 것을 아주 가벼운 어떤 질병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여러 가지 극복하신 분들 또 회복되신 분들을 보더라도 이걸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질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드 코로나라기보다는 저희들로서는 국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의 지혜를 모으고 국민들의 협력을 받아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우리들의 그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합의를 만들어 내겠다 그런 어떤 생

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순 의원 그러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그리고 어느 시기쯤에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를 독감처럼 그냥 일상적으로 함께, 자유로운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함께 살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마는 우선은 백신 접종률이 지금 아까 약속한 대로 확실히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또 역시 전파라든가 이런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중증화율입니다. 이 중에서 위험하거나 중증화로 가거나 혹은 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들의 의료체계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가 하는 이런 판단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결코 지금 이 상황이 국민들의 협력과 인내가 있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희생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의 희생이 너무 오래가는 데 대한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국민들한테 상황을 납득시켜 드리고 그렇게 다음 단계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순 의원 며칠 전에 자영업자들이 견디다 못해서 차량 시위까지 나서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순 의원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런 위드 코로나의 개념은 좀 그렇다 할지라도 일상 회복 또 자유로운 경제활동,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방역의 대전환이 있어야 되고 정부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이런 상태로 하루빨리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이 정부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백신 접종, 그러니까 2차 접종까지 완료를 10월 말이나 이때까지 되면 과감하게 그런 정책을 해 봐야 되고 그 중간 단계에서는 시험적인 여러 정책을 좀 시행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세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 소위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같은 나라들조차도 확진자 숫자가 어떨 때는 감당 못 할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을 국민들이

다 받아내 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말하자면 대수롭지 않은 질병으로 우리가 처리가 가능할까 이런 우리 역량까지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곧 이렇게 하겠다라는 큰소리를 못칩니다.

○박영순 의원 저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먹는 치료약, 그러니까 경구용 치료제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제약회사들이 임상실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예.

○박영순 의원 정부에서도 올해 추정예산과 내년 본예산에 합해서 한 362억에 한 3만 8000명분 정도의 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한 170만 명분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3만 8000명분의 경구용 치료제 계약은 만약에 지금과 같은 코로나 확진자 수, 거의 한 일이천 명 가까이, 1700명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발생하면 이건 너무나 빨리 소진되는 물량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치료제 개발에, 확실하게 임상실험이 끝나고 상용화될 수 있을 즈음인 것이 올 말쯤이라고 판단되면 그쯤에 맞춰서 상당한 물량의 먹는 치료제를 확보하면 이 위드 코로나 단계로 확실히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초기에 백신 수급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던 것처럼 이 먹는 치료제 확보 문제, 아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추경과 내년 예산에 지금 3만 8000명분이 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바로, 치료제가 나온다는 것은 또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또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외국 제약사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금 실험단계에 있는, 상당한 정도 또 진전이 있는 그런 제약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의원님, 지금 여기 3만 8000명분에,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치료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영순 의원 지금 국내 치료제 개발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지금 특정 업체 이름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대응제약의 경우에는 2상까지 지금 가 있는 것 같고요, 신평제약도 2상 정도까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순 의원 그러면 그걸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걸 쓸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도 어쨌건 승인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의 영역이…… 그러니까요 그건 전문가의 영역이어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말하는 우리가 해외에서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FDA를 비롯한 여러 검증기관들이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순 의원 총리님, 저는 정부가 백신 접종 70% 또는 80% 단계, 그리고 그쯤 가면 치료제를 상용화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서 올해 말이면 올해 말쯤 또는 내년 초라도 위드 코로나 상태로 가야 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그쯤에서 좀 자유롭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된다면 분명히 경기진작 정책이 있어야 될 거고, 그랬을 때 소상공인이라든가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회복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현재 이번 정부 예산안에 그것이 적절하게 반영됐는지 그게 좀 의문입니다.

지금 그것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의원님, 지금 현재 최소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정부는 해야만 합니다. 다만 거기에는 보면 제한한다든가 혹은 금지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직접적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실보상의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간접피해,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인원수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이런 등등 때문에 그분들이 기대하는 어떤 보상액과 정부가 준비하는 그 차이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분들이 더 이상 쓰러지지 않게 정부가 제 역할을 하라는 그런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영순 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 이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경제지표들이 있습니다.

잠깐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고용형태별로는 일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가 그리고 연령별로는 비정규직이 많은 20대의 고용지표가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소득 증가율도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고, 업종별로는 여행사 영화 공연장 항공사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고, 숙박 음식 등 서비스업종은 부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좁힐 수 있는지 총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우선은 워낙 이번에 직격탄을 맞은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이전소득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해서 우선은 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수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빨리 일종의 회복에 들어간 쪽은 또 그런 정도로 기여를 해서 연관산업이라든가 제조업 또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을 회복하도록 정부가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래 먹거리, 인공지능이라든가 또 IT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대비, 직업훈련 이런 부분들 또 반도체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업훈련 등을 통해서 이 세대들이 닥쳐올 어떤 이다음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를 시키는 것 그게 정부가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박영순 의원 일단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심화된 부문과 또 그리고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예, 이걸 뭐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순 의원 그리고 총리님, 다음은 대전·충남 혁신도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역주민들의 실망이 큼니다. 그동안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청와대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최근 감사열 국가균형발

전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늦어진 이유를 정무적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님, 군발위가 작년에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아직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결론이 안 난 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문제인 정부가 남아 있는 시간이 지금 한 8~9개월이니까 이 시간까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정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이른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어떤 획기적인 전환을 만들어 낼 건가 이런 데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만간 정부가…… 이번에 보니까 의회 내에서도, 특히 여당 원내대표께서 또 그런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준비한 데까지 그리고 우리 문제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박영순 의원 총리님,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문제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되고요 이걸 다음 정부로 넘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이 그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뭘니까, 혁신도시에 따른……

특히 대전·충남은 지난 16년 동안 혁신도시에서 제외돼서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고 문제인 정권 내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의원님, 하여튼 지금 특히 감사한 것은 예를 들면 대전시 경우에는 옛날처럼 별도의 도시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 구도심의 활성화랄까 이런 부분들하고 혁신도시의 정신을 연결해서 구도심의 재생하고 이걸 갖다 한번 엮어서 해 보자라는 그런 좋은 제안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만간 거기에 대한 저희 정부의 의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 의원 조만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믿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조만간이 뭐 오늘내일은 아니고요. 의원님, 그것까지는 좀 양해해 주시면……

○박영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이인영 예, 나왔습니다.

○**박영순 의원** 장관님,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협의하기 위해서 내일 만난다고 들었습니다. 대북 지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고 시기는 언제쯤이며 북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과연 북한이 이걸로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을 만큼 매력을 느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인영** 인도주의 협력과 관련해서 품목 혹은 분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한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검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보건의료, 방역, 감염병 이런 것과 관련한 영역이 하나 있고 또 식수, 위생 이런 것과 관련한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정도의 규모로 진행할 건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으로 완전히 다 정리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인도주의 협력이 실제로 재개되는 것과 관련해서 그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우선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게 정치·군사·안보 상황하고 무관하게 추진한다 이런 입장이 있고, 미국도 트럼프 정부 시절과는 또 다르게 바이든 정부에서는 인도주의 협력은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기처럼 인도주의 협력에 있어서도 우선 관계개선에 있어서의 속도 조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중단되거나 혹은 연기되거나 이런 가능성들은 굉장히 적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로 인도주의 협력에 있어 가지고 북이 어떤 수용 의사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인도주의 협력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협의를 필요로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북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대응전략 또 북·중 관계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국경의 개방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도주의 자체에 대해서 북에서 좀 소극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지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는 북이 인도주의 협력 문제에 대해서 과소평가한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적대정책의 철회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본질적인 영역들을 더 키우

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비핵화 협상이나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평화를 위한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빠르게 실질적인 협력의 영역들은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의 인도주의 협력이라든가 민생 분야에 있어서의 인도주의 협력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또 실제적인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순 의원** 북과 잘 협의가 돼서 인도주의 지원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하는 목적은 뭡니까? 한반도 교착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들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 외교적인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이인영** 외교부장관님이 직접 대답하실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양자 관계 영역들도 있고 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중국의 어떤 건설적인 역할이 있는 건지, 특히 내년 베이징 올림픽이 예고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순 의원**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이 부장의 방문 계기를 통해서 마땅한 역할을 주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인영**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박영순 의원** 어제 북한은 사거리 1500km 순항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북 인도 지원 문제나 또는 남북대화의 모멘텀이 깨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인영** 우선 순항미사일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와 관련한 탄도미사일이 아니니까 명시적으로 제재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문구상의 문제일 수 있고.

전반적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이러저러한 사항들이 자꾸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비핵화나 평화를 향한 합의정신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충실하게 지켜져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우리 정부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그럴수록 여전히 우리의 국방이나 안보에 대한 태세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조기에 비핵화와 평화의 과정으로 나올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필요성 이런 것들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순 의원 상황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요.

장관님, 하노이 노딜과 3차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관계가 소강상태로 오래 지속되었고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후속조치들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남북교류나 왕래조차도 잘 안 되고 있고요.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인영 상세하게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선 2018년도 평창올림픽 이후 한껏 고양됐던 한반도 평화 정세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있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직전 해였던 2017년에 한반도에 전운이 고조되고 말로는 폭탄을 주고받는 그런 말의 전쟁이 있었던 상황에 비해서 지금 상황은 그래도 정세를 좀 우리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공동연락소가 폭파되고 또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의 피격 상황이 있었던,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그때의 정세보다도 부분적이지만 정세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한 부분들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의 입장이, 대북 정책이 오바마 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도 아니고 또 트럼프 정부 시절의 압박과 관여 이런 정책도 아니고 조율되고 또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서 말하자면 대북정책이 단계적이고 또 동시적인 어떤 상응조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통해서 북과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 이런

부분들이 더 있는 점들도 하나의 조건일 수 있고 또 북이 조기에 ICBM이나 핵실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긴장을 통해 가지고, 군사적 긴장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제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양호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긴장의 요소도 많이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정세의 가변성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평화나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여건을 발판으로 해서 더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순 의원 분단 이후 최초로 세 번이나 북·미 정상회담이 대면하고 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획기적인 평화의 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매우 컸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북 제재와 대립국면으로 최소한의 교류와 왕래조차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석이 코앞인데 남북 이산가족 상봉조차도 못 하고 있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김대중 정부 때 금강산 관광, 노무현 정부 때 개성공단 같은 남북 실질 교류협력사업이 이루어졌던 때보다도 사실은 더 후퇴됐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통일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북한이 핵 개발을 했고 또 이에 대해 미국과 유엔의 제재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김대중·노무현 시대도 남북 대립이 첨예했고 또 북·미 갈등도 컸었습니다. 또 많은 교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차원에서 평화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결단으로 이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노이 노딜 그다음에 판문점 회담 이후 2년가량이 지나고 있는데도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특별한 어떤 움직임이 없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조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인영 제재 이전과 제재 이후의 상황이 많이 다르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많이 다르고 또 특히 남·북·미 관계 발전에 있어서 하노이에서의 노딜 그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런 점들이 인도주의 협력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전반, 한반도 평화정

세 전반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통일부는 그것을 핑계로 삼지 않고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상황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순 의원 장관님, 비록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반도의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그런 길을 쉽 없이 장관님이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인영 고맙습니다.

○박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국가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서 국가는 무엇인가? 어떤 후보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후보는 국민의 삶을 왜 국가가 책임지냐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위험 사회에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 시대에 국가의 과제는 복지 강화와 고용국가로의 전환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안전국가, 복지국가, 고용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정치권이 함께 지혜를 모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상희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주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이제 8개월 남았습니다. 이 정권 4년 4개월 동안 이루어진 것은 법치 유린과 피해해진 국민의 삶뿐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자화자찬에 바쁘고 정작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은 이 정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묻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국무총리로 취임하시고 나서 처음 맞는 국감이시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예, 정기국회 처음이지요.

○전주혜 의원 보니까 현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던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예.

○전주혜 의원 총리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우리 헌법도 바로 그게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만큼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혜 의원 그러면 지금 작금의 이 문재인 정부의 수사기관이 이러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의원님, 그것은 보는 입장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야당은 다른 견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 예상대로 답변을 하시네요.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예, 공수처에 의해서 김웅 국회의원님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 김웅 의원이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저는 그 내용은 모르고요,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영장은 법원에서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주혜 의원 참고인 신분입니다.

총리께서도 4선의 국회의원 지내셨는데요 그 사이에 국회의원실 압수수색한 경우 보거나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한두 차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마는 그것은 상당히, 국회하고 아마 절차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상의되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 그분들 모두 피의자 신분이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그 무렵에 그렇게 압수수색을 당하신 분들이요?

○전주혜 의원 예.

○국무총리 김부겸 ……

○전주혜 의원 총리님, 참고인 신분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친여 성향의 한 시민단체가 지난 6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자마자 공수처는 3일 만에 광속도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다음 날인 10일 참고인 신분인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과잉수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의원님, 김웅 의원님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됐나 모르겠지만 법원은 그러면 참고인한테도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 법원에서? 결국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야기인데.

○전주혜 의원 지금 답변하는 위치에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전주혜 의원 헌법상 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각별한 주의를 촉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의원님, 그런데 공수처는 조금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원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총리가 통할하는 범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전주혜 의원 수수방관하시겠다는 건가요?

○국무총리 김부겸 수수방관은 아니지만 이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지위인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전주혜 의원 한번 들어 보세요.

○국무총리 김부겸 예.

○전주혜 의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날의 압수수색은 명백한 불법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김웅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공수처에서 의원실에 와서 김웅 의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적법한 영장 제시도 없었습니다.

총리님, 피압수자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글썄, 제가 아는 상식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주혜 의원 그렇지요? 형사소송법에서는 압수수색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영장의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진들의 PC를 압수수색하고 보좌진들의 개인 캐비닛을 열람해서 서류를 수색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이런 행위가 야당 탄압이자 명백한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불법수색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일이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의원님, 아시겠습니까마는 공수처는 또 어떤……

○전주혜 의원 문제는 더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면서 여쭙보겠습니다.

공수처가 PC를 압수수색하면서 고발 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런 키워드를 입력했는데요. 그중에 ‘미애’, ‘재수’, ‘경심’ 이러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총리님, 미애, 재수, 경심은 영장 범죄사실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이 중에 미애는 도대체 누구를 지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의원님, 저는 이런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전주혜 의원 김미애, 박미애, 추미애 중에서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김부겸 의원님,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다.

○전주혜 의원 이렇게 영장 범죄사실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을 왜 공수처가 입력해서 관련 정보를 추출하려 한 것일까요?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이 없습니다.

○전주혜 의원 유감은 표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공수처라는 게 총리의 지휘하에 있는 그런 기관도 아니고요 또 공수처가 자신들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에 의해서 발부를 받아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절차상 분명히 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

○전주혜 의원 파악을 해 보시지요.

이 역시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별건수사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합리

적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선 개입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입했다는 여러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지요. 조성은 씨가 언론 보도화 여부를 고민하던 그 시기에 박지원 국정원장 만났다, 8월 11일에 만났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예, 언론에 그렇게 보도됐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 어제 조성은 씨는 또 뭐라 그러냐 하면 9월 2일, 뉴스버스에 보도된 9월 2일 이것은 원장님, 박지원 원장님과 내가 원한 날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국무총리 김부겸 의원님, 아까 권성동 의원님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가정을 가지고 답변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전주혜 의원 원장님이 원한 날짜가 아니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국무총리 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이 무슨 입장을 발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전주혜 의원 보도화 여부를 고민하던 그 시점, 8월 11일에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났다, 그리고 9월 2일은 박 원장이 원한 날짜가 아니었다.

영접결에 진답이 나온 겁니다. 결국 박지원 원장이 뉴스버스 보도 사실을 최소한은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일관된 입장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내용을 알지를 못하는데 뭐라고, 의원님이 가정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전주혜 의원 여기 가정적인 질문은 없습니다. 총리님의 모르쇠 답변만 있을 뿐이지요.

총리님, 바쁘시잖아요. 점심시간에 공무가 아니라 사회에서 알고 지내던 분들을 만나서 식사하실 만한 이런 여유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가끔 제가 무슨 충고를 받거나 바깥 여론을 청취할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 박지원 원장이 8월 11일에 식사비를 어느 카드로 결제했는지 이러한 공금유용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기

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주혜 의원 왜 적절치가 않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아니, 국정원장이 어떤 카드를 쓰셨는지 그것을 어떻게 제가……

○전주혜 의원 공금유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단, 이 부분은 밝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고발 사주의 가장 큰 쟁점이 윤 총장이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느냐 여부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예, 지금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전주혜 의원 그런데 뉴스버스가 첫 보도를 한 게 9월 2일인데요 바로 그 전날인 9월 1일 김웅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 김웅 의원이 9월 1일에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윤 총장과 관계가 없다’ 이 이야기를 뉴스버스에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버스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분은 쏙 빼고 손준성 검사가 보낸 텔레그램만 가지고 고발 사주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가짜 기사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공정한 보도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어떠한 의혹을 가지고 야권의 대선에 개입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 더 여쭙보겠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윤석열 총장이 지시한 것이라고 뉴스버스 그리고 여권이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나왔지만 총리님, 김경수 지사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의 수행실장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전주혜 의원 그러면 김 지사가 공모한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마찬가지로 문재인 후보가 지시한 것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김부겸 결국 우리들이 신봉하는 사법체계는 본인의 책임이 명확할 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주혜 의원 그러니까 같은 논리로 하면 마찬가지로 같은 지시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수사기관

의 중립성,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부분은 법무부장관께 여쭙보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장관님, 법무연수원에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지난번 용인分院에서 시행했습니다.

○**전주혜 의원** 지난 금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김웅 의원에 대한 피압수 장소가 세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 자택에서 영장을 제시했으니까 의원실에서는 또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장소마다 제시하는 게 원칙이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원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전주혜 의원** 지금 이렇게 공수처가 하고 있어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그 사실관계가……

○**전주혜 의원** 그래서 법무부가 잘 좀 교육을 해 주십시오. 이게 일타삼피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아니, 영장을 일타삼피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아무튼 전주혜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공수처 얘기도 한번 들어 보고 저희들이 어떤 처분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설마 의원실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그런 궁금증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전주혜 의원** 적법한 제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반인이든 누구든 공익신고할 수는 있는데 이번에 조성은 씨 경우는 굉장히 기이합니다. 왜냐? 대검 검찰부장에게 직접 연락해서 공익신고했다는 건데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그 역시 조성은 씨의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의원님 혹시 걱정하시는 의혹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혜 의원** 해소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여쭙보는 거고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아, 그렇습니까?

○**전주혜 의원** 아니, 대검 검찰부장에게 직접 연락해서 하면 그러면 대검 검찰부장 핸드폰이나

그 전화번호를 모든 국민에게 다 공개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요.

한동수 검찰부장은 휴대전화 제출하면 공익신고인으로 지정해 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그 워딩도 그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마치 덜하듯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조성은 씨의 인터뷰 내용을 다 꼼꼼히 봤습니다만 전후 맥락이 있는 얘기입니다.

○**전주혜 의원**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혜 의원**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조성은 씨가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또 공수처는 애초부터 공익신고자 절차를 다 준비해 뒀으니까 오자마자 해 줄 수 있다, 빨리 협조해 달라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지금 공수처는 아예 적극적으로 공익신고자 지정까지 제공하면서 광속도로 이 사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이러한 태도가 정상적이라고 보세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공수처가 판단할 일입니다.

○**전주혜 의원** 장관님, 대검에서 진상조사 중인 것은 우선적으로 손준성 검사의 고발장 작성입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그렇습니다.

○**전주혜 의원** 그런데 지난 10일 김웅 의원실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압수수색 범죄 사실은 좀 다릅니다.

PPT를 보면서 여쭙보겠습니다.

여기 피의자들은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인데요. 장관님이 법사위에 나와서도 말씀하신 것은 손준성 검사의 고발장 작성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진상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을 보면 ‘피의자들이 공모해서—손준성 검사도 포함돼 있습니다—대검찰청 소속 성명 불상의 검사로 하여금 고발장을 작성하게 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검 조사는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제가 지난번 법사위의 위원님들 뵈 땐 그 이후 단계는 일부러라도 확인을 하지 않았습다. 그러나 저는 진상조사가 꽤 밀도 있게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 이게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가 작성을 한 거랑……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알고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 손준성 검사가 제3의 대검 검사에게 작성한 거랑은 달라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그러니까 규명을 해야 되겠지요.

○전주혜 의원 왜냐하면 그럴수록 윤석열 총장의 관여는 훨씬 혐의가 더 늘어집니다. 왜냐하면 윤 총장, 손준성 검사, 제3의 검사 이렇게 돼 있는 구조잖아요, 지금 이 범죄사실은. 그런데 지금 뉴스버스에서 얘기하는 것, 대검에서 진상조사한다고 얘기하셨던 것은 윤 총장, 손준성 검사 이렇게 2단계,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굉장히 의혹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수사 초기 압색영장이기 때문에 범죄사실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사실이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 선거 개입이 있는데요 고발장에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로 접수되도록 하여’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이것 뉴스버스에서조차 고발장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도된 것을 전제로 이렇게 범죄사실이 돼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오히려 고발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수사의 초기 단계이고 압색영장은 왕왕, 의원님 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완전하게 범죄사실을 구성하기는 어려운 단계입니다.

○전주혜 의원 그래서 지금 이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대검에서도 아주 광속도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공수처도 지금 광속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거든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아니지요, 국민의힘……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전주혜 의원 윤석열 총장이 야권의 후보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겠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아니, 그것은 국민의힘조차도 신속한 수사를 지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주혜 의원 그래서 장관님께 드리는 말씀은

검찰의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전주혜 의원님도 신속한 수사를 원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 마치겠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상희 전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구성동구를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중구성동구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저는 비극의 한국 정치사를 돌아보는 것으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국 정치사의 비극을 초래한 두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군인과 정치검찰입니다. 1961년 군사 쿠데타로 권위주의 군사독재 정부가 세워지고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민주주의의 광복이 오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981년 신군부가 들어섭니다. 이때 정치군인의 표상은 전두환이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군부가 무너지자 검찰이 권력의 중심으로 등장합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이 불기소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정치에 정치검찰이 등장합니다. 2012년 박근혜 정권에서 김기춘, 우병우는 정치검찰을 상징합니다. 결국 2017년 촛불혁명으로 박근혜정부는 탄핵을 맞게 됩니다. 이때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정치군인과 정치검찰이 약 30년 주기로 교차하면서 해서는 안 될 정치 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이 시점에 마치 정치군인의 망령이 정치검찰로 되살아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치를 흙탕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발 청부 고발 사주 의혹과 표적수사 사건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이 얼마나 검찰 권한을 사유화하고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김영삼 전 대통령을 잘 아시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개인적으로 잘 알진 않습니다만……

○**박성준 의원** 한국 정치사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시고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물론입니다.

○**박성준 의원** 우리 국민의힘의 원류고 보수의 원류라고 하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역사적인 업적은 뭐였을까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제 기억으로는 금융실명제 이런 것들……

○**박성준 의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군정 종식시키셨고……

○**법무부장관 박범계** 하나회……

○**박성준 의원** 하나회 체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군인을 청산하고 군을 어떻게 했지요? 본연의 군으로 갖다 놓은 분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그렇게 기여하셨습니다.

○**박성준 의원** 저는 YS라고 하는 정신을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군인을 청산하고 군을 올바르게 세웠듯이 국민의힘은 YS 정신을 계승하고 이어받아서 정치검찰을 청산하고 검찰을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오늘날 국민의힘의 정당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박성준 의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박성준 의원** 그리고 저는 장관님이 취임할 때, 청문회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관님의 이 시대의 역사적, 장관 취임의 역사적 의미가 뭘까? 역사적 사명, 소명의식이 뭘까?’ 그런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검찰개혁을 잘 마무리 하라고 하는 소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마무리 투수를 잘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 나시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박성준 의원** 장관님은 저는 이 시점에 이 검찰발 고발 사주 의혹 이 문제를 정말로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계기를 만들어서 이 계기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소명이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의 그 역사적 소명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존경하는 박성준 의원님, 지금 2021년입니다. 2019년, 2020년 상간에 걸친 이 사건의 의혹에 대해서 정말 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검찰이 많이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가 전국 일선에 다녀 보면서 조직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사법통제와 인권보호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많은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이참에 정말 다시 한번 복기를 해서 검찰개혁의 제대로 된 어떤 취지를 되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박성준 의원** 한국 정치사를 되돌아보면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제왕이 성립되기 위한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될 때 제왕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없을 때가 필요조건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임기가 없을 때 제왕이라는 조건을 씁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엄격하게 권력분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임기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제왕적 조직은 있다.

그 제왕적 조직을 뭐라고 보십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말씀하십시오.

○**박성준 의원** 제왕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의 행사에 제약이 없을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 부분이고요.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임기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검찰조직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권력을 분산해서 실질적으로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데 오늘날 검찰조직은 너무나 권한이 집중됐기 때문에 이러한 검찰발 사주 의혹과 같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엑튼 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지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여기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절대권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절대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왜 국민들이 많은 검찰개혁을 외칠까요? 장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공수처의 설치 또 검경 수사권의 조정 또 조직문화의 일부 개선 등을 통해서 검찰권이 상당히 분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더 짚어 봐야 될 대목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박성준 의원**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화면을 좀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윤석열, 손준성, 정점식 의원 또 김웅 의원이 등장하는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검찰이지요.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검찰발 청부 고발 사주 의혹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건데.

과거에 우리가 정치검찰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는 뭐였느냐 하면 검찰이 정치권에 줄을 대서 자신의 이익이라든가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 이런 경우를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때는 뭐냐 하면 정치권의 종속변수로서의 정치검찰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 스스로 검사들이 사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체가 돼서 정치를 하고 공작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의혹 제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치검찰은 객체였다면 이번의 정치검찰은 뭐냐 하면 스스로 정치를 해서 야당에게 고발장을 건네서 정치 개입을 하려고 하고 선거공작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주체로서 등장하고 있다, 과거의 정치검찰과 지금 이 시점의 정치검찰의 개념 자체가 다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반드시 규명해야 될 지점이……

○**박성준 의원** 당연하지요. 그래서 이 정치검찰이라는 개념도 바뀌고 있다는 거지요. 정치검찰도 진화했습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요.

지금 정점식 의원이 총선 당시에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 뒤 자문단장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것은 계속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겨레21의 자료를 저희가 했는데,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해서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것을 정점식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 그리고 미래통합당 당무감사실장, 조상규 변호사가 접수를 해서 고발장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점식 의원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해당 문서를 본 적이 없고 실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당시 당무감사실장은 어떤 거였느냐 하면 정점식 의원에게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알고 계시지요? 보도에 나온 내용입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보도상으로는……

○**박성준 의원** 지금 얘기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2020년 4월 3일, 8일 이 고발장 접수 시점과 최강욱 의원과 관련된 고발장 접수는 4개월 이후에 고발장 접수가 됩니다. 메커니즘이 작동했던 것이지요. 이 부분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점식 의원이 당시에 어떤 일을 했고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저는 이 수사에 관련된 부분, 조사에 관련된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야당의 법률지원단장이 검찰과 유착관계가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조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물론입니다. 규명돼야 될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박성준 의원**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은 손준성 검사입니다. 손준성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 자리에 있었는데, 앞서도 많은 의원들이 얘기했던군요. 수사정보정책관은 대검 차장을 보좌하지만 총장에게 직보하는 체제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총장의 눈과 귀로 불려 왔다. 그리고 윤석열 징계 결정문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 징계 사유로 적시된 재판부 동향 파악, 즉 판사 사찰 문건을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개인의 일탈행위로 고발장을 접수해서 야당에게 던져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조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판사 사찰 문건은 수사정보정책관실, 즉 손준성 검사가 정책관으로 있는 그 실에서 만들어진 것이 인정이 됐고 자료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 이 사건의 키맨은 손준성 검사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그렇다면 제가 아까 다른 의원님 질문에 답을 드렸는데요 그 시점과 이러한 오늘날의 고발 사주와 관련된 고발장의 작성 관여 여부 이런 등등의 유사성도 아주 중요한 조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준 의원** 검사 조직은 보고에서 시작해서 보고에 끝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이 행위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안 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이고요, 보고했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이 검사 조직 자체가 정치검찰로 비화됐는지, 악화됐는지 여실히 드러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에 대한 수사는 명명백백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보면요 검찰의 정보조직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개혁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추후에 이 검찰의 조직, 정보조직과 관련된 부분을 개혁할 방안이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지금 검찰권의 분권화와 함께 대검이 꼭 이런 정보 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지방검찰청 단위의 수사정보, 필요한 수사정보는 수집이 가능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의 문제제기를 기회로 대검의 수사정보담당관실의 폐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박성준 의원** 그리고 김웅 의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직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등장한 보도 내용을 보면 텔레그램 방을 폭파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 것은 김웅 의원이 이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증거능력을 갖춘 증거들이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그러한 텔레그램과 같은 디지털 정보들 또 공익신고자의 여러 인터뷰들 등을 종합해 보면 상당한 정도의, 현재까지 적어도 고발장이 만들어져서 정당에 전달되는 그 과정에서의 의혹들은 상당 부분 규명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성준 의원** 그러니까 김웅 의원은 당시에 위

법의 중대성, 탈법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저는 인지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을 폭파하라고 지시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김웅 의원이, 제보자의 얘기입니다. ‘고발장을 꼭 대검에 접수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증언한 것을 보면 고발장의 배당 문제까지도 김웅 의원이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손준성 검사와 일정하게 연결된 고리가 여기에서도 파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그 부분 역시 규명돼야 될……

○**박성준 의원** 하나 더 나아가서요,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저희가 PPT 준비했는데 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당시 윤석열 총장이 2019년 7월 25일부터 21년 3월 5일까지 재직을 했는데 여권을 상대로 한 야당발 소송이 빈번합니다. 보면 2019년 9월 10일 한국당 법무부장관 강요죄로 고발한 사건이 있었고요, 2019년 8월 14일 직권남용 혐의를 대상으로 해서 조국 장관을 검찰 고발하고요 또 2019년 8월 21일에 한국당이 조국 일가 사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한국당이 또 조국·백원우·송철호·송병기 등 8월 14일 날 이 내용을, 고발한 내용을 보면 윤석열 검찰과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여기에 유착 메커니즘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게 합니다. 이 사건의 맥락이 상당히 유사성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이 건 고발장에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를 모두 전제 부분에 열거를 했다는 지점입니다. 2019년 8월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점까지, 그 지점 지적까지 함께 검토를 해 보면 글썽요, 선불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역시 이 부분도 규명돼야 될, 특히 조성은 씨의 말에 의하면 사찰이니 뭐 이런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규명되어야 될 지점입니다.

○**박성준 의원** 그러니까 2019년 8월, 9월을 보면 조국 전 장관 취임 즈음에 있었던 사건들인데 야당발 고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 부분을 조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 검찰 조직과 관련된 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데 자치경찰제가 있듯이 자치검찰제에 대한 개혁 방안도 한번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 방안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아까 제가 분권 말씀을 드렸는데요 향후에 우리 과제가 있다면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라는 측면에서 자치경찰제도 도입됐기 때문에 검찰권의 분권도 심도 깊게 논의해야 될 대상입니다.

(김상희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박성준 의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혹을 충분히 풀어 주시고요 또 개혁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고맙습니다.

○**박성준 의원** 1987년과 2017년은 세상이 바뀌는 개혁의 상징이었습니다. 1987년의 6월 항쟁 구호는 ‘정치군인 물러가라’였고요, 2017년 촛불혁명 구호는 ‘정치검찰 물러가라’였습니다. 그러니까 87년은 정치군인, 2017년은 정치검찰 물러가라였습니다.

전두환은 신군부의 수장이자 정치군인의 표상이었습니다. 정치군인은 1987년의 함성으로 무너졌습니다.

이명박을 불기소처분하면서 등장한 정치검찰은 박근혜정부로 이어졌고 2017년 촛불혁명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2021년 지금 청산될 줄 알았던 정치검찰이 귀환을 꿈꾸고 있습니다. 수많은 희생으로 이루어 냈던 청산에 대한 반동의 역사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검찰발 청부 고발 사주, 표적수사 등으로 마치 정치군인의 망령이 검찰로 옮겨 간 듯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떠올립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하나회를 척결하면서 군정을 종식시켰습니다. 그의 최대 업적이고 그의 정신입니다. 그는 현 국민의힘과 보수의 원류입니다. 그를 계승한다면 정치검찰의 청산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것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정치검찰 청산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의장 박병석**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의 이용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 호남 유일의 순수 무소속 이용호 의원입니다.

코로나19는 바이러스만 전염시킨 게 아니라 집 없는 서민들에게, 자영업자에게, 2030 젊은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앗아 갔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살게 될 거야’라고 하는 훈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뼈를 갈아 넣어 일해도 없는 사람은 자꾸만 힘들어지는 희망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정의로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자문을 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 의원** 현 정부가 이룬 가장 큰 성과, 업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그래도 역시 코로나19라는 이런 사회적인, 전 지구적인 대재앙을 맞아서 국민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위기를 같이 극복해 가고 있는 것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로 권력기관 등이 민주화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부분들이 실천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 좀 미흡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국무총리 김부겸** 많은 분들의 지적 받은 대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자산의 양극화를 고착화시킨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일 아픈 것 같습니다.

○**이용호 의원** 참 열심히 해 왔는데 그만큼 성과가 안 났다고 하는 평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총리께서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예.

○**이용호 의원** 우리나라 부자 1위가 누구인지 아세요, 1위 부자, 돈 가장 많은 사람?

○**국무총리 김부겸** 최근에 플랫폼 사업을 하시는 어떤 분이 1위로 올랐다 그런 건 봤습니다만……

○**이용호 의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이런 사람이 아니라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입니다. 사실 흙수저 출신인데요 놀라운 변화이고 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대기업이 된 카카오의 행태를 보면 혁신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칭찬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화면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뭐처럼 보이니까?

반도체 회로처럼 보이는데 저게 카카오 기업 계열도입니다.

계열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여기 나와……

○이용호 의원 올해 6월 3일 자로 보면 국내가 117개 그리고 해외가 41개, 그래서 158개입니다. 올해 4월, 5월, 6월에는 무려 15개 계열 기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매주 하나씩 회사를 공장에서 찍어 내듯이 늘리고 있습니다.

이것 바람직합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역대 정부들이 재벌의 독점적인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많은 규제를 가하고 또 여러 가지 지배구조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혹시 이렇게 문어발식 확장을 한다는 데 대해서 평가가 좋게 나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용호 의원 제대로 보셨는데요, 과거 재벌도 이런 식으로는 안 했습니다. 그래도 국민의 정서를 조금 살피면서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팬데믹을 이용해서 정말로 무차별적으로 늘렸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사 IPO를 해서 자금을 모으잖아요. 그 돈으로 계열 회사를 막 사들이는 겁니다. 결국 IPO 했다는 뜻은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예, 그렇겠지요.

○이용호 의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카카오가 진출한 업종이 대부분 중소기업, 소상공인, 골목시장 이런 업종들이에요. 예를 들면 택시, 택배, 대리운전, 퀵서비스, 자전거 대여, 꽃배달, 헤어샵, 스크린골프, 골프앱, 심지어 방문수리. 더 있습니다만 제가…… 정말 손대지 않은 업종이 없을 지경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낮은 단가 그리고 무료 서비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용자들, 업체들을 모은 다음에 시장이 독점적으로 되면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또 가격을 인상하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국무총리 김부겸 아마 그런 것을 막으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경찰로서 이를 보고 있을 텐

데요,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무슨 혁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 이른바 독점적 재벌들이 하던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거기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들어가고 필요하면 또 강제적 조치도 취해야 되겠지요.

○이용호 의원 그런 규제 조치를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글썄, 그것은 규제 조치가 들어가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만으로 가능한 건지 혹은 그들이 어떤 했는지, 법망을 피해 갔는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깐 이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이 어려울 때 오히려 문어발식 확장을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이것은 공정위가 좀 명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의원 요즘에 기업인들 사이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카카오가 분야에 들어왔다고 그러면 ‘팔고 빠지든지 아니면 사업 접어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런 플랫폼사업자 규제를 가해야 되는데요. 알다시피 카카오, 네이버, 쿠팡 이런 쪽에 제안하고 싶은 게, 이런 분들이 M&A를 하거나 새로운 분야에 진출할 때는 이게 골목상권을 침해하는지 영향을 평가해서 인허가를 주도록 하는 게 어떤가?

물론 총리께서 다 하실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마인드를 이런 업체들이 진출하면 기존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영향평가를 해서 인허가를 주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그 쪽의 요구사항입니다.

한번 좀 검토를……

○국무총리 김부겸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전 단계에 있어서의 독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현재 법망을 피해 간 게 없는지 또 법적 제재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우선 살펴보고요.

그다음 단계,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결국 했다는 게 새로운 글로벌 경쟁을 하거나 무슨 혁신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있는, 소위 서민경제의 생태계를 말하자면 침탈하는 일이라면 우리 공동체가 그것까지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호 의원** 물론 해외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들어올 때 방어한 측면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풀어놓다 보니까, 그냥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M&A를 하고 늘리다 보니까 너무 피해가 생겨서 이제 새로운 규제를 좀 만들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국무총리 김부겸** 의원님, 하여튼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독점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어떤 부분에서 허점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이용호 의원** 또 한 가지는 금산분리 원칙인데요, 기본 산업자본한테는 금융 안 주거든요.

○**국무총리 김부겸** 예, 그래 왔지요.

○**이용호 의원**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특별법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썼는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재고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 김부겸** 당시는 핀테크라는 어떤 새로운 영역에서 아마 선두주자로서 그만한 여러 가지 시장 선도자로서의 이점을 받은 것 같은데 바로 그 결과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어발식 확장으로 나타났다면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감시와 감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호 의원** 코로나19 재난적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많은 국민들이 플랫폼사업자들의 노동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 의원** 그래서 좀 규제를 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문제입니다만 총리께서도 관용차 타시지요? 어떤 차 타세요? 총리님은 어떤 차종 타세요?

○**국무총리 김부겸** 원래는 제가……

○**이용호 의원** 제네시스 G90……

○**국무총리 김부겸** 지금 정부에서 주는 관용차는 제가 차종을 모릅니다.

○**이용호 의원**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가격이?

○**국무총리 김부겸** 정확하게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비싼 차를 타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제일 좋은 차래도 1억 정도 안팎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들이 업무용 차량으로 해 놓고, 사실은 기업에서 근무하고 열심히 일해서 사는 사람들은 좋은 차 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해외의 초고가차를 꼭 수입해서 타야 되는가?

사실 국민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감정이 용납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총리께서도 1억 안팎 정도 타는데 왜 꼭 수억 원대 해외차를 업무용으로 해 놓고 이렇게 품을 잡아야 되나 이런 제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인은 좋은데 자식, 손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화면 한번 보세요.

저 차 보셨어요? 저 차가 45억짜리입니다, 45억 짜리. 그런데 저게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가격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이거 타라고 해도 안 탈 거예요, 못 탈 거고. 그런데 대한민국에 저런 차를 등록해 놓고 업무용이다 그러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글썄, 자신의 재산으로써 확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말하자면 비용도 지불하고 하는 것은 어찌겠습니까마는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회사에 등록을 해서, 말하자면 회사의 비용으로 차값이나 혹은 리스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이것은 회계처리나 이런 데 있어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용호 의원** 저는 거대 개혁 담론 좋습니다만 주변에서 실현가능한 이런 것부터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세청에서 개선방안 만든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총리께서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예,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이용호 의원** 그리고 요즘에 언론중재법, 이것도 잠깐 총리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요.

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저게 어떤 그림입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컵에 물이 담겨 있는데요.

○**이용호 의원** 그렇지요? 컵에 물이 절반쯤 담겨 있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예.

○**이용호 의원** 물이 절반쯤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언론이 자꾸 물이 절반밖에 없다, 절반이 비었다 이렇게 기분 나쁘게 자꾸 보도하면 이것 가짜뉴스입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가짜뉴스는 아니지요.

○**이용호 의원** 아니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예.

○**이용호 의원** 그러면 물이 상당히 비었다 이런

게 보도하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상당히 비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용호 의원 그러면 가짜뉴스가 되려면 어떻게 보도하면 가짜뉴스가 될까요?

○국무총리 김부겸 글썽, 물에…… 예를 들면 이 컵에는 독극물이 들었다든가 혹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짜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용호 의원 맞습니다. 여기에 콜라가 들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컵이 좀 어둡침침한 데 들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가 있기는 한데 확실히 보도하기가 어려워요, 뭔가 의혹이 있기는 한데. 이런 경우 오보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 김부겸 예.

○이용호 의원 그런데 그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보?

○국무총리 김부겸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말하자면 보도자가 오보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여부도 아마 여러 가지 판단의 기준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용호 의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혹시 기자들의 편파·왜곡 보도, 과장 보도 이걸 가짜뉴스라고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부분이고요.

오보는 기자가 사명감을 갖고 보도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보를 때려잡으면 보도자료 외에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무총리 김부겸 의원님, 이번에는 말하자면 주로 소위 권력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언론중재법을 활용할 수 없다고 아마 합의가 되어 가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통 사람들이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받았을 때 그건 회복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적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는 언론중재법의 개정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용호 의원 언론 행태에도 저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는 현행법 체계에서도 민법상 손해배상이 가능하고요 형법상 명예훼손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구제책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징벌적으로 꼭 때려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국무총리 김부겸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8인 협의체가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타협안을 만들어 내서 국민들이 이 상황을 납득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용호 의원 문제인 대통령께서 2년 전에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30위까지 끌어올리겠다. 지금 43위거든요. 그런데 언론중재법이 오히려 순위를 더 끌어내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언론의 자유라는 어떤 본질, 그것을 침해할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다만 그동안 잘못된 언론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피해를 받은 국민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그 피해를 감내해야 되는 이 현실은 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절박감이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 공감대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공공의대 들어 보셨어요?

○국무총리 김부겸 예, 공공의대.

○이용호 의원 그것 전북에 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의사협회하고 정부 사이에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 논의를 당분간, 의과대학 정원이라든가 의대 학생 수의 증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분간 논의를 조금 유보하기로 했기 때문에 의원님, 이것은 조금……

○이용호 의원 총리님 계실 때 가능하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까지……

○이용호 의원 백신 두 번 맞으면, 이제 워드 코로나가 되면 해도……

○국무총리 김부겸 그렇게 저희들이…… 이것은 중요 과제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의원 전북에서 문제인 대통령 가장 많이 지지해 줬거든요. 전남은 한전공대 해 주고 부산은 가덕도 해 주는데 전북은 뭐냐 하는 실망이 많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의원님, 그런 문제라기보다

도 이 공공의대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가 있다 하는 것은 뭐 국민들이……

○이용호 의원 아니, 이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 날치기해도 되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왜 이것은 자꾸 해태합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의원님, 가능한 한 날치기 안 하고 서로 타협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용호 의원 그리고 전북 남원의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등재하려고 하는……

○이용호 의원 등재하려고 하는 것.

○국무총리 김부겸 하려고 노력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 환영할 일인데 이게 ‘기문’이라는 용어를 놓고 지금 시민사회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기문이라는 게 친일이다, 아니다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요. 문화재청이 책임 있게 교통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부겸 글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전문가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습시다마는 그것을 진행하는 측에서 보니까 역사적인 사료에 그 일대를 기문국이라고 했다는 거지 이게……

○이용호 의원 그게 친일 사료라는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 김부겸 그러니까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는 분들의 어떤 그것하고는 다른 의미에서 여러 가지 기록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문제는 학문적인 영역이니까, 의원님 이것은 조금 전문가 영역……

○이용호 의원 그러면 이게 가르마가 타진 다음에 등록하도록 하는 게 맞지요?

○국무총리 김부겸 지금 토론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용호 의원 이게 주장의 문제입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이지?

○국무총리 김부겸 글썄요, 의원님 그런데 그 당시 사료라는 게 그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 자신들이 주장할 근거는 다 있는 것으로……

○이용호 의원 기록의 문화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잖아요.

○국무총리 김부겸 그래서 의원님, 이것은 워낙 전문적 영역이라서 제가 조금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용호 의원 이것 총리님께서 좀 챙겨 달라라는 뜻입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문화재청이 적어도 기왕에 유네스코 등재라는 이런 역사적 과업을 하려면 가능한 한 다양한 목소리들을 서로 녹여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성실히 찾아보라 그렇게는 요청하겠습니다.

○이용호 의원 고맙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다음 묻겠습니다.

검찰의 고발 사주 논란 시끄러운데요, 다른 측면에서 검찰 문제를 제가 짚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1대 총선 이후에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죄로 무리하게 기소돼서 1·2·3심 무죄로 났습니다. 들으셨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인 저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반증입니다. 제가 재판해 보니까 이것 무리하게 기소해 놓고 그것을 진짜 유죄 이끌어내려고 얼마나 갖은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소가 이렇게 막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소 남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무죄가 왕왕 있고 그 무죄가 나는 경향성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 무죄 부분에 대한 사후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용호 의원 검사가 법리에 무지했거나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 제 기소에 대해서 외부의 입김이 들어갔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뭐 무죄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용호 의원 그런데 검사는 기소해 놓고 나중에 무죄 나오면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무죄 평정을 하기는 합니다.

○이용호 의원 불이익당하는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대검 감찰부로부터 무죄와 관련된 평정을 받고 그것을 인사에 반영하고 또 검사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적격심사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이용호 의원 제 경우 어떻게 됐는지 조사할 거지요, 무리한지 아닌지 오해가 있는지? 다 한다면서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의원** 그 결과 나오면 좀 보고해 주십시오.

무죄가 평균적으로 검사 과오로 인해서 얼마나 됩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통계치는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이용호 의원** 제가 알기는 한 15% 됩니다. 15%면 6명 중에 1명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알아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될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마는……

○**이용호 의원** 저는 검찰개혁 중요한데요 정말로 기소 무리하게 안 했으면, 남용 안 했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무리하게 기소해서 무죄된 검사 이걸 좀 불이익 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검사가 그렇게 막 못 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검사가 신중하게 기소할 수 있도록 최종 무죄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제도적으로 인사든 하여튼 어떤 거든 좀 거기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이용호 의원님 지적처럼 신중한 기소 또 공판의 강화 또 사후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의원** 고맙습니다.

.....
(시각자료는 전자회의록에 게재함)

○**의장 박병석** 이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서울 광진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온 세상이 검찰과 야당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떠들썩합니다. 국회의원이 무슨 대단한 특권인양 야당은 압수수색도 받지 않겠다며 꿈쩍하지 않더니 사흘이 지나서야 대단한 아량을 베푸는 듯 압수수색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야당 탄압이라며 눈동그랗게 뜨고 달려드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합

니다. 제보자를 흠집 내기 위해서 김웅 의원은 국민의힘이 아닌 황당한 캠프에 소속돼 있다며 거짓을 말하고, 윤석열 후보는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면서 인신공격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불리하다 싶으면 제보자의 신뢰성을 깎아내리고 전혀 엉뚱한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들고 철 지난 드라마 안에서나 나올 법한 수법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같은 의원으로서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수사받고 그 자리에서 진실을 가리면 될 일입니다. 또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면 됩니다. 국면이 불리해지면 소리 지르고 화내는 것이 전매특허인 양 너무나 당당한 모습에 기가 찹니다.

본인의 오락가락한 해명으로 사건을 더욱 키워 놓고서는 야당 탄압이라며 화를 내지를 않나, 자신의 잘못이 아니면 증명하면 될 일을 국민들 앞에서 내가 무섭나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지를 않나, 이렇게 사생결단하듯 달려드는 모양새가 정말로 밝혀지면 안 될 숨기고 싶은 사안이 있는가 보다 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김웅 의원 또 정점식 의원 또 윤석열 후보 모두가 검찰 출신입니다. 손준성 검사가 보낸 고발장을 판박이처럼 베껴 쓴 고발장을 보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괴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 검찰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제1야당을 행동부대로 동원한 사건이었음을 모두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들을 통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질문 답을 계속해 오셨을 텐데요 그만큼 국민적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사안이고 절대로 그냥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될 사건임을 장관께서도 잘 직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물론입니다.

○**고민정 의원** 몇 가지만 좀 짚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웅 의원이 제보자에게 공소장과 함께 첨부자료로서 제출했던 실명 판결문이 있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고민정 의원** 그런데 이 판결문에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실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그러한 판결문을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쉽게 획득할 수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전혀 불가능합니다.

○**고민정 의원** 일반인들은 그래도 유사한 판결문들을 좀 볼 수 있는 방법이 뭐 조금이라도 있나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현재로서는 그 판결문 제공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고민정 의원** 그러면 실명이 적혀 있는 것은 아마도 검찰 관계자들, 검찰이나 법원이나 혹은 사건 당사자 이런 분들 외에는 실명이 적혀 있는 판결문은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맞습니다.

○**고민정 의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일반인은 접근이 불가능하고 검사들이 볼 수 있는 어떤 열람 사이트가 있을 텐데 그게 뭐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KICS라는 그런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민정 의원** 거기에 들어가면 검사들은 실명이 적혀 있는 판결문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 의원** 그러면 그 로그 기록에는 누가 이 판결문을 열람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그렇습니다.

○**고민정 의원** 확인해 보셨나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민정 의원** 그냥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국민들의 이 사안에 대한 모든 의혹들이 해명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과연 이 판결문을 검찰 내부에서 본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이 판결문은 실명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사건들에 대한 시선들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정작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얼마나 연루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로그 기록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봐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입니다. 여러 가지 건들이 있습니다만 기록을 보니까 2020년 2월부터 21년 7월까지 대검에서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들만 봐도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특별하고 내밀한 관계로 보여지는데요.

장관님, 통상 어떤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웁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아무래도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우겠지요.

○**고민정 의원** 그렇지요.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사람을 아무래도 증인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조사를 할 때는 양측의 증인들을 다 부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고민정 의원** 그러면 내가 부를 수 있는 증인들은 아무래도 나의 입장에서 나의 결백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부를 수밖에 없는 게 상식선일 것 같은데 맞나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 의원** 2020년 12월 10일에 윤석열 전 총장은 판사 사찰 그리고 조선일보 사주와의 만남을 이유로 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됐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고민정 의원** 당시에 윤석열 총장 측 증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

○**고민정 의원** 4명이 있거든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뭐 한 두세 명은 기억을 합니다.

○**고민정 의원** 그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입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맞는 것 같습니다.

○**고민정 의원** 그리고 당시에 이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기억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손준성 검사가 지휘하는 그 실의 담당관이었습니다.

○**고민정 의원** 예, 제가 징계 결정문을 봤는데요 그 결정문에 따르면 ‘손준성은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로 자료를 수집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본인이 작성했다는 것이……

○**법무부장관 박범계** 인정했……

○**고민정 의원** 이 판결문에도 있는 거거든요, 결정문에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이 건으로 인해서 징계 처분도 받지 않았습니까? 참 많은 일들을 같이 했구나 하는 것이 이 사건만 보더라도 일단 증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인사와 관련돼서인데요 얼마 전에 추

미에 전 장관께서 ‘손준성 검사에 대해 유임 의견을 냈다고 한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지요? 들은 바 있지요? 윤 총장이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유임 의견을 냈다라고……

○**법무부장관 박범계** 그 얘기는 법무·검찰 쪽에서는 거의 아주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

○**고민정 의원** 그만큼 윤석열 총장과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는 반드시 함께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동지적 관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의 인사 조치가 더 있었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고민정 의원** 장관님 시절 아니신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제가 부임하고 대검 검사급 인사가 소폭으로 이루어진 뒤에 고검 검사급 인사가 진행될 즈음에 저는 전임 장관 계실 때의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생각해서 인사를 하려 했었습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역시 그 대목에서 유임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총장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고민정 의원**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두 장관에게 유임 의견을 낸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력에 보면 20년 2월까지의 수사정보 정책관인데 20년 9월까지의 수사정보담당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책관과 담당관의 직급 차이가, 일반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어떤 게 더 높은 겁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정책관이 차장검사급, 그래서 바로 검사장 승진 서열에 가는 것이고요. 8월에 담당관, 즉 부장검사급으로 격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임의 의지가 있었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고민정 의원** 좌천당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본인이 밝혔습니다. ‘윤 총장이 굉장히 외로운 상황이니 너라도 보필하고 힘내라’.

대검 안에서만도 검사들이 수십 명 되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고민정 의원** 그중에서 왜 하필 손준성 검사에게 윤 총장을 보필해 달라라고 말을 했는가, 과연 두 사람의 관계가 먼 관계라면 김웅 의원이 이런 필요 없는 말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지만 안 되었고 결국 오늘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왜 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말 그대로 범죄의 정황이 있어서 그 범죄를 밝히고 범인을 밝혀내는 그런 과정에 수단으로서는 제일……

○**고민정 의원** 그러면 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을 합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누구랑요?

○**고민정 의원** 압수수색을 당하는 대상자와.

○**법무부장관 박범계** 그렇게 되면 도망가지 않을까요? 즉 숨기지 않을까요?

○**고민정 의원** 그렇지요. 당연히 불시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압수수색일 거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상식입니다. 수사의 밀행성이라는 거지요, 그게.

○**고민정 의원** 그런데 왜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아니요, 들어가는 과정에 시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김웅 의원의 주거지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그래서 공수처의 주장은 그때 이미 상당 부분 설명을 했고 협조를 받는 것으로 알았다, 그래서 의원회관으로 갔는데 저항을 받았다 이런 게 공수처의 주장이고, 김웅 의원실 쪽에서는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다른 취지의 그러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고민정 의원** 김웅 의원은 ‘의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라고 말한 것을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요. 즉 이 대목에서 거짓말을 누가 했는지 여부는 공수처 검사와 김웅 의원 그리고 그 보좌관, 셋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보좌관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공수처 검사는 그 보좌관으로부터 의원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전달받았다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도 전달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대목에서 김웅 의원은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사흘이 지나기는 했지만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법부가 너무 권력 앞에서 좌고우면하고 무른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다른 일반 국민에게도 이러셨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 그러면 만일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어떤 중요한 단서가 삭제되거나 변동이 되면 그것 어떻게 됩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그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하지요. 아마 그러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며칠 지났지만 대상 컴퓨터가 특징이 되었기 때문에……

○**고민정 의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손준성 검사의 텔레그램입니다.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텔레그램 계정이 어젯밤 9시까지에는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는 탈퇴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고민정 의원**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증거 아닌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고, 그러나 반대편에서 공익신고자가 제가 보기에는 증거보전과 같은 그러한 조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고민정 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증거를 인멸한 행위가 입증이 됐을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는 것이겠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법적인 개념의 증거인멸이라고 제가 숙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어찌 됐든 텔레그램 방의 폭과 또 본인 텔레그램 계정의 해체 이런 것들은 고민정 의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 그리고 검찰공무원의 비위가 나오면 장관께서는 해당 검찰총장과 감찰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 맞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당연합니다.

○**고민정 의원** 그런데 손준성 PC 포렌식을 했는데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보도에 혼선들이 있는데요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된다고 생각하고요.

○**고민정 의원** 보고를 받으셨다는 뜻입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1차 보고는 받았습시다만 그로부터 한 사나흘 정도는, 오늘 아침에도 보고

를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보고를 받지 않아도 적어도 우리 대검은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고민정 의원** 그게 의지에 대한 믿음 관계로만 넘어갈 일이 아니라……

○**법무부장관 박범계** 아니, 의원님……

○**고민정 의원** 모든 국민들의 의혹이 해명이 돼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쭙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손준성 PC만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 로그 기록을 확인해서라도 누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것 동의하시지요?

이 고발장이 있던 그 당시에, 선거가 있기 전 쯤에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야당에게 사주한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는데, 인지수사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그냥 본인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수사를 진행해도 되는데 왜 인지수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고발수사로 한 거지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인지수사와 이 고발수사라는?

○**법무부장관 박범계** 대상이 언론인들이고 국회 의원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입니다, 대상이. 인지수사를 하기가 녹록지 않은 것은 법조계에서는 거의 상식에 가까운……

○**고민정 의원**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고발 사주를 한 것으로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핵심을 자꾸 흐트러뜨리고 있다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느 것 하나, 진실이 뭔지가 지금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 없다고 하더니 정점식 의원이 당무감사실로 보냈다고 확인을 해 줬지요. 김웅 의원도 제보자가 황당한 캠프에서 일한다고 했지만 이것도 거짓이지요. 다 거짓말투성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검찰과 그리고 제1야당이 선거 개입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판을 흔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하고 의심이 되고요. 무엇보다 공수처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아, 우리나라에 정의가 살아 있구나. 사법부를 믿고 가도 되겠구나’ 하고 확신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쟁겨 주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진상규명 신속하게 반드시 해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민정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석 고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6시 44분입니다.

마지막까지 대정부질문을 경청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명단을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강대식 의원, 고민정 의원, 구자근 의원, 김민기 의원, 김승원 의원, 김영호 의원, 김예지 의원, 박성중 의원, 백혜련 의원, 서영교 의원, 소병철 의원, 윤미향 의원, 윤영덕 의원, 윤주경 의원, 이은주 의원, 이종성 의원, 이주환 의원, 이현승 의원, 전용기 의원, 조오섭 의원, 주철현 의원, 진성준 의원, 최연숙 의원, 최혜영 의원, 한병도 의원.

이분들은 성실한 의원으로서 속기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출석 의원(269인)

강기윤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은미
강준현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곽상도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영세	권은희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홍	김기현
김남국	김도읍	김두관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선교
김성주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판	김원이	김윤덕
김은혜	김의겸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호	김태흠	김한정
김홍걸	김희재	김희곤	김희국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광온	박대수
박대출	박범계	박병석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중	박수영
박영순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준영	배진교

백종현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정숙	설훈
성일종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영길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원식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병길	안호영	양경숙	양금희
양기대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오영훈	윤희인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경준
유기홍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두현
윤미향	윤상현	윤영덕	윤영석
윤영찬	윤재갑	윤재옥	윤주경
윤준병	윤창현	윤한홍	윤희중
윤후덕	윤희숙	이개호	이광재
이규민	이달곤	이동주	이명수
이병훈	이상민	이상현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인영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탄희
이태규	이해식	이현승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이자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제원	장철민
장혜영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진주혜	진해철	진혜숙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운천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찬민	정청래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수진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조정식	조태용	조해진
주철현	주호영	지성호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연숙	최인호	최종윤	최춘식
최형두	최혜영	추경호	태영호
하영제	하태경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준호	허영	허은아
허종식	홍기원	홍문표	홍석준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개회 시 재석 의원(83인)

강대식	강민국	강민정	강은미
-----	-----	-----	-----

곽상도	구자근	권명호	권영세
김기현	김병욱	김상훈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용판	김은혜
김정재	김주영	김태호	김희곤
김희국	류성걸	류호정	문진석
박대출	박병석	박성중	박수영
박완수	박주민	박형수	배준영
배진교	백종현	서병수	서정숙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심상정
안병길	양금희	양향자	용혜인
유의동	윤두현	윤미향	윤재옥
윤주경	윤창현	윤후덕	윤희숙
이달곤	이은주	이재정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현승
임이자	임종성	장혜영	전주혜
정경희	정운천	정점식	정찬민
조명희	조수진	조태용	조해진
지성호	최연숙	최춘식	최형두
추경호	태영호	하영제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홍석준	

○산회 시 재석 의원(29인)

강대식	고민정	구자근	김민기
김승원	김영호	김예지	박범계
박병석	박성중	백혜련	서영교
소병철	윤미향	윤영덕	윤주경
이은주	이인영	이종성	이주환
이현승	전용기	전해철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최연숙	최혜영
한병도			

○출장 의원(4인)

강훈식	엄태영	이학영	조정훈
-----	-----	-----	-----

○청가 의원(19인)

권칠승	김미애	김석기	김성원
김웅	김형동	남인순	박덕흠
박진	신정훈	양이원영	이만희
이양수	이영	이용	정춘숙
한정애	황보승희	황희	

○국회 참석자

사무총장	이춘석
입법차장	전상수
의사국장	박태형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김부겸
통일부장관	이인영

법무부장관	박범계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보고사항】

○소위원회 선임

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여성가족	청원심사	서정숙	국민의힘	2021. 9. 9.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예산결산 심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안 제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1. 9. 9. 이주환·김태흠·박대수·박덕흠·
백종현·윤창현·이명수·이현승·지성호·
태영호 의원 발의)

9월 1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

(2021. 9. 9. 김교홍·홍영표·이성만·허종식·
배진교·배준영·서영교·윤관석·박찬대·
이동주·유동수·신동근·정일영·윤상현·
맹성규 의원 발의)

9월 10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1. 9. 9. 박주민·강민정·김용민·김종민·
류호정·박성준·양정숙·오기형·유정주·
최혜영 의원 발의)

9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9. 9. 정부 제출)

9월 10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21. 9. 9. 박덕흠·엄태영·류성걸·장제원·
신원식·김성원·이명수·윤두현·이종배·
이만희 의원 발의)

9월 1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

(2021. 9. 9. 유정주·강선우·권인숙·김홍걸·
도종환·서영교·신정훈·이병훈·이상현·
이수진(비)·임오경·장경태·장철민·최혜영·
허영·홍정민 의원 발의)

9월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1. 9. 9. 김미애 · 박덕흠 · 金炳旭 · 김상훈 · 최승재 · 백종헌 · 이양수 · 김형동 · 윤주경 · 이종배 · 성일중 의원 발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1. 9. 9. 강기윤 · 구자근 · 김상훈 · 김선교 · 김은혜 · 김희국 · 박대수 · 백종헌 · 서병수 · 엄태영 · 이종성 의원 발의)

뇌전증 관리 및 뇌진증환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1. 9. 9. 강기윤 · 김은혜 · 엄태영 · 서병수 · 장재원 · 김희국 · 김태호 · 이종성 · 김선교 · 배현진 · 박대수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1. 9. 9. 윤준병 · 강선우 · 김민철 · 김성주 · 김수홍 · 안호영 · 양정숙 · 오영환 · 위성곤 · 이원택 의원 발의)

9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1. 9. 10. 이주환 · 김태흠 · 박대수 · 박덕흠 · 백종헌 · 윤창현 · 이명수 · 이현승 · 지성호 · 태영호 · 홍문표 의원 발의)

공공감사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2021. 9. 10. 박수영 · 김선교 · 김영식 · 김형동 · 김희곤 · 박형수 · 백종헌 · 서일준 · 유경준 · 윤주경 · 이종성 · 정운천 · 조명희 · 최형두 · 하영제 의원 발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2021. 9. 10. 정운천 · 서일준 · 김태호 · 권은희 · 홍문표 · 김용관 · 전재수 · 엄태영 · 백종헌 · 추경호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1. 9. 10. 고용진 · 강훈식 · 김경만 · 김민철 · 김수홍 · 양향자 · 윤관석 · 윤준병 · 임오경 · 한준호 의원 발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2021. 9. 10. 허종식 · 김교홍 · 김민기 · 김민석 · 김성주 · 김성환 · 김정호 · 김진표 · 박찬대 · 배진교 · 어기구 · 유동수 · 윤준병 · 이동주 · 이성만 · 이용선 · 정일영 · 정춘숙 · 최종윤 · 홍영표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1. 9. 10. 고민정 · 강준현 · 고영인 · 김민석 · 김승남 · 김영배 · 김영주 · 김의겸 · 김정호 · 도종환 · 류호정 · 민병덕 · 오영환 · 우원식 · 윤준병 · 이규민 · 장경태 · 조오섭 · 진선미 · 천준호 · 최강욱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홍영표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1. 9. 10. 고민정 · 강준현 · 고영인 · 김민석 · 김승남 · 김승수 · 김영주 · 김정호 · 도종환 · 류호정 · 민병덕 · 박주민 · 신현영 · 안규백 · 오영환 · 우원식 · 윤미향 · 윤준병 · 이규민 · 이성만 · 이형석 · 장경태 · 정일영 · 조오섭 · 진선미 · 천준호 · 최강욱 · 최혜영 · 허영 · 허종식 · 홍영표 · 홍익표 의원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1. 9. 10. 이수진 · 김승원 · 이형석 · 신정훈 · 임호선 · 임오경 · 허영 · 송갑석 · 홍정민 · 황운하 · 김영주 · 강병원 · 민형배 · 윤영덕 · 윤건영 · 김영배 의원 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1. 9. 10. 임오경 · 장철민 · 오영환 · 유정주 · 최종윤 · 박성준 · 김태년 · 임호선 · 변재일 · 김정호 · 한준호 · 이병훈 · 이상현 · 도종환 · 윤준병 · 조오섭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1. 9. 10. 고민정 · 오영환 · 최혜영 · 조오섭 · 위성곤 · 김원이 · 용혜인 · 이규민 · 김정호 · 기동민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2021. 9. 10. 오영환 · 김정호 · 문진석 · 박상혁 · 송재호 · 양정숙 · 오영환 · 위성곤 · 조오섭 · 진성준 의원 발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1. 9. 10. 이병훈 · 강병원 · 고용진 · 김홍걸 · 박성준 · 신영대 · 오영환 · 유정주 · 윤재갑 · 이상현 의원 발의)

공간복지기본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21. 9. 10. 윤관석 · 고용진 · 권철승 · 김교홍 · 김수홍 · 김홍걸 · 이수진(비) · 이용선 · 임호선 ·

정성호 의원 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2021. 9. 10. 김진표 · 강선우 · 고용진 · 김병기 ·
김정호 · 민홍철 · 박광온 · 박성준 · 신정훈 ·
안규백 · 윤준병 · 이상현 · 최종윤 의원 발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2021. 9. 10. 김진표 · 강선우 · 고용진 · 김병기 ·
김정호 · 민홍철 · 박광온 · 박성준 · 안규백 ·
윤준병 · 이상현 · 최종윤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
발의)**

(2021. 9. 10. 변재일 · 한준호 · 조정훈 · 강준현 ·
이학영 · 박홍근 · 임호선 · 이장섭 · 서영석 ·
이용빈 의원 발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21. 9. 10. 정일영 · 김교홍 · 김주영 · 민형배 ·
박찬대 · 배준영 · 송석준 · 이상현 · 조정식 ·
허종식 의원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1. 9. 10. 추경호 · 구자근 · 김용관 · 윤창현 ·
태영호 · 성일종 · 이종배 · 김예지 · 임이자 ·
엄태영 · 김도읍 · 조명희 의원 발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1. 9. 10. 정태호 · 홍익표 · 장철민 · 허영 ·
한병도 · 이수진 · 이광재 · 강득구 · 김영배 ·
홍기원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
발의)**

(2021. 9. 10. 추경호 · 구자근 · 김용관 · 윤창현 ·
태영호 · 성일종 · 이종배 · 김예지 · 임이자 ·
엄태영 · 김도읍 · 조명희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1. 9. 10. 추경호 · 구자근 · 김용관 · 윤창현 ·
태영호 · 성일종 · 이종배 · 김예지 · 임이자 ·
엄태영 · 김도읍 · 조명희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1. 9. 10. 강병원 · 기동민 · 김민석 · 김성주 ·
김정호 · 서영석 · 오영환 · 이수진 · 이수진(비) ·
전혜숙 의원 발의)

이상 22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
(대안)**

일본 정부의 '군함도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
한국인 강제노역'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대안)

(이상 2건 2021. 9. 10.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청원 제출

故손○○군 사건 CCTV공개와 함께 과학적인
재수사 엄중촉구에 관한 청원

(2021. 9. 12. 김보나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